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희망의 새시대

이 자료는 2015년 1월 13일(화)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체질, 확 바꾸겠습니다! 구조개혁,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2015 업무보고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I

2015. 1. 13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 목

## 차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고용노동부] ..... 1
2.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29
3.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국토교통부] ..... 53
4.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원년 소통과 실천으로  
대도약을 이루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69
5. 전통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해양수산부] ..... 95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고용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LABOR MARKET  
FLEXICURITY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목 차

I. 우리 노동시장 진단과 평가 .....	5
II.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목표와 방향 .....	9
III. 새로운 노동시장의 룰 .....	10
Rule 1.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	10
Rule 2.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	14
Rule 3.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	16
Rule 4.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확산 .....	20
IV. 추진방안 .....	23
〈붙임〉 추진일정	



# I. 우리 노동시장 진단과 평가

## 국민은 금년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음

\* (15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일자리창출 32.0%, 경제활성화 25.8%, 민생안정 23.1%, 경제구조 개혁 14.3%, 리스크관리 강화 4.4%

□ 정부는 '13.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수립하여 고용률을 국정목표로 삼아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

\* 수출·제조업·대기업·남성·전일제·장시간근로 →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여성·시간제·일가정양립  
\* 그간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95개 후속대책 발표 및 31개 법률 제·개정 성과

○ 청년·여성 등 핵심대상을 중심으로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14년에는 선택과 집중 하에 3대 브랜드과제의 성과 창출 기틀 마련

일학습 병행제	· 참여: 선정된 기업 2,079개소, 학습근로자 3,197명(730개소) · 만족도(5점척도): 기업 3.7점, 근로자 4.2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 확산: 기업의 채용희망인원 ('12년) 4,184 → ('14년) 17,939명 * 채용박람회 (11회, 취업 1만명) · 민간: 병원·은행·제조업 우수사례 도출 * 긍정평가 75%(상의 '14.10월) * 취업의향 ('13년) 63.5 → ('14년) 73.6% · 공공부문 선도: 공무원 1,007명, 공공기관 채용목표(3%)
고용복지+ 센터	· '14년 10곳 개소 ('15년 31 → '17년 70곳 ※ 누적) · 성과: 취업실적 증가율 29.9%(평균 8.5%) 서비스연계: 959건('14.9~12월)

○ 現정부 출범 전에 비해 고용률이 1.2%p 상승('12년 64.2% → '14.1~11월 65.4%), 역대 최초로 65%를 돌파하고 상용직 증가 등 일자리 질도 개선

\* 고용률 추이(%): ('02년) 63.3 → ('07년) 63.9 → ('12년) 64.2 → ('14.1~11월) 65.4  
\*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12년) 62.7 → ('13년) 64.4 → ('14.1~11월) 64.8  
\* 시간제(천명): ('13.3월) 1,757 → ('14.8월) 2,032, 고용보험가입률 2.3%p↑, 자발성 3.3%p↑

○ 여성과 장년층이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고, 청년고용도 증가

\* 취업자 증감(천명): 청년(15-29세) ('12년) △36 → ('13년) △50 → ('14.1~11월) 80  
여성(15세+) ('12년) 203 → ('13년) 200 → ('14.1~11월) 270  
장년(50-64세) ('12년) 332 → ('13년) 320 → ('14.1~11월) 333

□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신호

\* 비경제활동인구 증감(15세+, 천명): ('12년) 128 → ('13년) 141 → ('14.1~11월) △261

##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 ('14.11월 고용노사관계학회 설문조사 결과)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  
일자리 부족 43.1%, 근로조건 격차 41.6%, 대립적 노사관계 7.1%, 사회안전망 미흡 6.4%

### □ 세계경제 불확실성, 글로벌 경쟁 심화는 성장과 고용에 도전적 환경

○ 여성(맞벌이), 장년(고령화)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대되는 가운데, 청년 고용 증가세가 미흡한 상황

○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필수

### □ 높은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비중 등으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격차사회' 논쟁 등)

\* 실질임금 상승률(%): ('12.4Q) 2.2→ ('13.4Q) 2.1→ ('14.3Q) 0.1  
실질가계소득 상승률(%): ('12.4Q) 3.6→ ('13.4Q) 0.7→ ('14.3Q) 1.6

###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혁신과 일을 통한 국민행복 달성 곤란

### □ 창조경제, 규제개혁,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 중소기업에 좋은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

\* 제조업의 '제2의 도약' 추진,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등 경제·산업정책 추진

○ 이와 함께 넓은 노동시장 시스템(인식·관행·제도) 개선 필요

##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일하기 어려움

\* ('14.11월 고용노사학회 설문조사 결과) 노동시장 문제점 발생의 원인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관계 29.8%, 대기업 노사의 이기주의 27.9%,  
취약근로자 보호 미흡 17.9%, 정규직근로자 과보호 15.0%, 재정투자 부족 8.4%

### □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는 현 노동시장이 처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시사

<p>“눈높이를 낮춰서 취업하라고요? 여러 번 원서를 냈지만 받아주지 않아요”</p> <p>* 지방대 인문계 출신 졸업생</p> 	<p>“지방공단에 가보면 근로자 100명 정도의 회사들도 채용공고를 보면 직접 채용은 별로 없고 하도급업체 채용공고가 많아요”</p> <p>* 특성학교 졸업생</p> 
<p>“이제 일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법으로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서 저를 어렵게 합니까?”</p> <p>* 기간제 여성 근로자</p> 	<p>“단체협약상 정년은 58세이지만 실제 정년은 52세예요. 임금이 1/3도 안되는 일자리에 재취업했지만 결국 그만두게 되어 아이들 볼 곳이 없어요.”</p> <p>* 중년 아버지</p> 

## ① 산업구조 변화에 노동시장 제도·관행이 부응하지 못해 현실과 괴리

- 현장수요와 괴리된 스펙 쌓기 경쟁 속에 막대한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 투자
  - \* 대졸신입사원 재교육에 평균 18.3개월 간 5,959만원('13년 경총)
-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임금·근로시간의 제도·관행은 복잡한 임금실태 및 스마트워크 등 새롭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문제
  - \* (예) 임금명칭과 실질의 괴리, 복잡한 임금항목 등이 통상임금 관련 혼란의 원인
- 연공급 임금체계가 일의 성과와 보상 간 연계를 약화시키고, 정년 연장과 맞물려 고령자 고용불안 등 부정적 효과 확대
  - \* 100인 이상 사업체의 68.3%가 호봉급 운영('14년 사업체노동실태조사). 직능급은 근속중심으로 승진이 이뤄지고, 직무급도 '호봉급+직무수당' 형태로 운영
  - \* 제조업 생산직 임금격차('10년, 배, 초임 대비 30년 이상): (韓)3.13 (獨)1.91 (프)1.46
  - \* 권고사직·명예퇴직으로 인한 조기퇴직비율: 16.9%('14년 고령자 경찰부가조사)
- 남성 家長 홀로 장시간근로 하는 업무 방식은 일-가정 양립 등 삶의 질 개선과 노동생산성의 지속적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
  - \* 연간근로시간('13년): (韓) 2,071시간, (OECD평균) 1,671시간 ※ OECD 3위/28국
  - \* 시간당 노동생산성('12년): (韓) 30.4\$, (OECD평균) 46.6\$ ※ OECD 28위/34국
  - \* 경력단절여성 규모('14년) 198만명, 이중 30대가 55%
-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 과정에서 근로자 보호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함
  - \* 기간제·파견 제한의 효과로 일부 정규직 전환 사례도 있으나, 단기·반복계약과 일자리 질이 더 낮은 하도급 형태로 전환되는 '풍선효과(balloon effect)' 경향
  - \* 사용기간 제한이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원하지 않는 불가피한 해고를 낳거나, '돌려쓰기식 운용'으로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 발생
-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침해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산업 구조·경영환경 속에서 근로조건에 개별적 결정·변경에 따른 분쟁 증가
  - \* 매년 1조원 규모의 임금체불 발생
  -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건수: ('12년) 11,444 → ('13년) 12,805 → ('14년) 12,996건
  - \* 정년연장 법제화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

## ②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 격차, 성과와 괴리된 차별적 처우문제 지속

\* ('14.11월 고용노사관계학회 설문조사 결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조건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40.4%), 대기업 노사의 책임 강화(17.1%), 정규직 고용 유연화(14.8%) 등

- 「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有노조」 노동시장(스펙경쟁, 강한보호, 높은 보상)과 「중소기업·비정규직·無노조」 노동시장(상시구인난, 약한보호, 낮은 보상) 간의 구조적 격차 심화

근로자 비중 ※ 경찰부가조사('14.8)		시간당 임금수준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3.6)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10.3%	정규직 57.3%	정규직= 100	정규직 53.8
비정규직 2.0%	비정규직 30.4%	비정규직 65.6	비정규직 36.7

\* 노동조합조직률(%): ('89년) 19.8→ ('10년) 9.8→ ('13년) 10.3  
(정규직) 13.9 (비정규직) 1.4  
(~29명) 1.0 (30~99명) 2.0 (100~299명) 8.6 (300명 이상) 47.7

-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기업 간 관계,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기업과 근로자 간 격차 확대, 괜찮은 청년일자리 부족에 일정 영향을 미쳐옴
  - \*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관행, 생산성을 상회하는 과도한 임금인상 교섭이 결과적으로 하청기업과 비정규직에게 돌아갈 성과분의 감소에 영향을 미쳐 온 측면
  - \*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문제를 둘러싸고 「원청기업 - 하청기업 - 하청노동조합」 간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불법파견 논란이 발생하는 등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

## ③ 일하는 사람의 고용·복지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충할 필요

- **최저임금 인상,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의 보장성·(재)취업 촉진 기능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필요**
  - \* 저임금근로자 비중(중위임금의 2/3미만, '12년): (韓) 25.2% (美) 25.2%, (獨) 18.4%, (日) 14.4%
  - \*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14년 34.6%),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14년 53.8%)
  -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고(40%대), 자영업자(임의가입)·특수형태업무종사자(산재보험 6개 직종 강제가입)는 적용되기 시작한 단계
- **고용과 복지서비스의 연계·확충을 강화해 틈새를 메우고, 보육 등 복지서비스도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할 필요**(관계부처)
  -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정보망 연계), 취업모에 유리하도록 보육지원서비스 개편 등
- **고용형태, 일하는 방식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노동시장의 공식화, 경제·사회적諸수단들의 동원 필요**



## 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목표와 방향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제고를 위한 구조적 개선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  
(「경제혁신 3개년계획」 2차년도 핵심과제)

- 이상의 노동시장이 처한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 속에  
우리 노동시장을 바꾸기 위한 다음 네 가지 룰(rule) 형성·정착이 필요
  - ①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 ② 비용 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 ③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 ④ 상생과 협력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성장 확산
- 지난 2년간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으로  
노동시장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왔음
  -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취업에 있어 불필요한 수고를 덜도록 하고,  
누구나 일한 만큼 공정하게 성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가로막는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필요
  - 아울러 취업애로계층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 경제적 애로 해결,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든든하게 돌보아야 함
-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정된 일터에서 일하는 행복을 누리며,  
성실한 근로자가 60세<sup>+</sup>까지 능력껏 일할 수 있도록  
미래 세대 일자리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고용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
- ❖ 근로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촉진

### Ⅲ. 새로운 노동시장의 룰

#### Rule 1.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 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공정한 성과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 (노사정위 논의 토대로 추진)

#### ①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 직무·성과·능력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지원

**국정**

#### 【60세 정년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 도입 및 인사관리제도 개편 지원】

- 대기업, 공공부문(경영평가 既반영) 등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집중 노사협의·교섭을 지원하여 60세 정년제('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안착
  - 중소기업('17년 시행)도 임금피크제 도입 컨설팅·재정지원 등 준비 지원 (정년 60세 조기 도입 사업장에 재정지원 확대: 연 840→1,080만원)
- 컨설팅 및 실행비용 보조 등을 통해 장년친화적 인사제도 개편 지원 (1개소당 3천만원 한도, 50개소)하고, 업종별 임금체계·인사모델 개발·확산

**국정**

#### 【민간기업의 직무·성과·능력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 선도그룹 발굴, 노사협력 지원 등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의 여건 조성 (관계부처, 유관기관 합동)
  - 주요 대기업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형성·지원하고, 정년연장·통상임금 등 임금체계 관련 현안의 해법 모색방안과도 연계
    - \* 선도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 기업경제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대표적 직무·직종, 업종 등을 고려한 학습·연구·시범적용 등을 추진
  - 중소기업에는 대기업 단위에서 형성된 모델 및 우수사례를 제공·독려
- 임금연구기관 육성, 정보제공, 컨설팅, 전문교육 등을 통해 개편 지원
  - 임금직무센터를 연구·조사·홍보 등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허브기관으로 확대·육성하고, 객관적 직무평가 기준을 마련·제공

- 임금체계 실태조사, 직종·직급별 임금조사 등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한 상세한 직종·직군별 임금정보 및 모델을 구축·제공
- 전문가가 참여하는 「임금체계 개편 서포터즈」 구성·운영, 전담교육 기관 확충·운영, 정책대상별 차별화된 홍보를 통해 공감대 형성
- 통상임금은 범위 명확화를 위해 대법원 전합 판결을 반영한 입법을 추진하고,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국정**

###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 선도】

- 직종·직급별 인사·임금시스템 마련 등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실천적 방안 마련 추진(관계부처TF 등)

## ② 단계적 총량 감축과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으로 장시간근로 개선

(※ 목표: '17년 1,900시간대→ '20년 1,800시간대)

**국정**

### 【과도한 휴일·연장근로 축소】

-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총량을 줄이되, 시행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 및 예외적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병행(근로기준법 개정)
- 연장근로(주12시간) 한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합리적으로 재조정(26개 업종, 328만명→ 10개 업종, 147만명)
- 근로시간 적용제외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
  - \* 현행법상 적용제외 부문: 5인 미만 사업장, 농어업 등 1차 산업 등
- 주야맞교대 사업장 등 장시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추가인력 확보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 컨설팅, 설비투자비(지원·융자), 신규근로자 채용 인건비, 기존근로자 임금보전비용(월 10→ 30만원) 등 패키지 지원
  - \* 자동차부품 제조업 밀집지역, 특화업종 등을 타깃으로 상시 채용지원체제 가동
- 일가양득 캠페인, 불필요한 휴일근무·야근 줄이기, 연가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국민 인식 확산

##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하여 혁신적 일터 조성】

**국정**

- 계절적 또는 불규칙한 생산수요 변동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가능하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現 3개월)
  - \* 선진국 사례: (獨) 6개월, 노사합의 시 1년, (佛·日 등) 1년
-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재량근로 대상 업무 추가**
  - \* 연구개발 직접 지원 업무 및 기획업무 중 일부 근로소득 상위자(예: 25%) 등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허용 여부 검토
- 현행 보상휴가제를 확대 개편하여 근로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대체·활용 가능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 「先휴가 後근로시간 적립」, 1년 이상 이월 등을 통해 장기간 휴가사용 활성화
-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감독자 기준을 명확화**하고, 장시간근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포괄임금제 개선·운용 매뉴얼** 마련
-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시차출근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공공부문의 적합 직종에 적극 도입**하여 민간기업을 선도

## ③ 채용·고용종료 단계에서의 고용관행 합리화

**국정**

### 【산업과 괴리된 스펙을 초월한 현장·능력중심의 채용시스템 구축】

- 기업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을 지원하여 **채용과 능력개발** 단계에서 구직자·근로자를 위한 신호기능을 내실화
  -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NCS 기반 채용** 틀 적용(관계부처 협업)
  - NCS 기반의 채용기준 활용, 사내 우수훈련과정 인증 등 **주력업종 및 대표기업의 성공사례를 창출**
    - \* 조기에 성과 도출이 가능한 민간부문의 타깃 업종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14년 SW·미용분야→ '15년 자동차·관광분야)
    - \* 직무와 무관한 스펙이 아닌 직무역량 중심의 평가·채용을 위해 「능력중심채용 모델」 개발·보급('15년 3개 직군 신규개발, 180개 기업 보급)
- 대학을 가지 않고도 학위에 버금가는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산업계가 직접 출제·평가·활용하는 **新직업자격** 설계 및 확산  
(NCS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 정비 완료, 15개 종목에 우선 과정평가형 도입)

- 졸업자의 대규모 공채 중심에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재학단계에서 우수 인재를 미리, 수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유도
  -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사업 실시(특성화고 9개교), **대학형 일학습병행제** 시범 도입(10개교)
    - \* 특성화고와 연계하여 고등전문대(고교3년+대학2년) 운영시 우선 선정, IPP확산
  - **대기업·공공부문 모범사례 확산**(대·중소상생형 일학습병행제, 20개사), **문화콘텐츠 등 부처별 특화모델** 발굴(부처별 전담기관 운영, R&D자금지원 연계)
  - 특성화고·(전문)대학과 도제기업 간 **학습근로자 채용네트워크** 구축

#### 국정

### 【서면으로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 소모적 분쟁 예방】

- 노사의 자율적 **서면근로계약 체결** 관행을 확산하고, 서면근로계약 체결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등 경제적 제재 확행
  - \* 서면근로계약 체결율: ('13년) 55.4%→ ('14년) 56.7%→ ('15년 목표) 60%대

#### 국정

### 【근로계약 해지 관련 절차·기준을 마련, 인력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 **경영상 해고 관련 절차적 요건 강화\*** 및 **일반적 근로계약 해지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 \* 해고회피노력 구체적 예시, 근로자대표 협의사항 확대 및 서면통보 의무화, 신고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우선 재고용 기회 확대(동일 업무→동일 직종)
  - \*\* 객관적 평가기준, 능력향상 등 교정기회 우선 부여, 직무·배치전환 등 사전 조치, 공정한 절차·운영 등과 함께 관련 부당노동행위 엄정 규제
- **퇴직 예정자에게** 상담·교육훈련·취업알선 등 **전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1인당 100만원) 등 **전직·재취업 지원 강화**
  - \* 지역별 서비스기관과 기업 간 매칭(사업주 훈련비 지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활용
- 근로조건 합리적 적용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 명확화**
  - \*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 구체화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구제명령 범위 확대**
  - \* 해고 이후 잔여 계약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이 가능하도록 변경

## Rule 2.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추진하여  
비정규직 남용과 불합리한 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정위 중심으로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 당사자 의견 등을 토대로 추진

**국정**

### 1] 불합리한 차별 개선

-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의 차별내용 시정지도(지침)
- 노동위원회 차별시정명령 효력 확대(단협 개정 지도),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명령 제도 확행
- 노동조합에 조합원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 부여(법개정)

**국정**

### 2] 고용형태별 당사자의 애로 해소를 통해 비정규직 남용 방지

- 중소기업 기간제·파견근로자, 기존 시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 \*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신설('15년)
  - 공공부문은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정규직 고용 원칙 견지('15년까지 65천명)
    - \* 정원 내 비정규직 비중 감축(공공기관: '16년부터 5%, 출연연구기관: '17년까지 20~30%)
-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가이드라인」의 노사자율 준수협약 체결 지원
  - \*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경력 인정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차별시정
- 기간제·파견의 적정 사용기간 등 검토
  - \* 본인(예: 2년 내, 35세 이상)희망 시 기간연장, 이후 정규직 미전환 시 이직수당 부과
- 총 계약기간(2년) 내 최대갱신 횟수(3회)를 제한, “쪼개기 계약” 관행 근절
-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 강화
-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적용하고, 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 이직 시에도 퇴직연금과 연계

### 3 고용형태별 사용관행 개선

**국정**

○ 건강한 파견 질서 확립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 사용-파견업체 계약 시 **파견 대가 항목 명시**(인건비·관리비 구분, 표준 계약서 제정·보급)

- **종합고용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제**(3년간, 정부사업 우선위탁 등) 도입

\* 사회보험 적용, 퇴직금 보장, 준법 사업운영 등에 관한 표준을 제시하고, 적합 기업에 인증 부여→ 인증업체만 공공조달 참여자격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실태 점검 및 미 준수사항 개선 지도

**국정**

○ **국민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기간제·파견 **사용을 제한**

\* 여객선 선장·기관장, 철도 기관사·관제사, 항공기 조종사·관제사 및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자

↳ 고위험 업종 대기업의 경우 외부 안전보건관리 위탁도 제한 추진

○ **55세 이상 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파견 허용**

\* 고령자는 파견 절대금지 및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외의 업무, 고소득·전문직은 파견 절대금지 외 표준직업분류 대분류1(관리직)·2(전문직) 업무

- 인력난(농어업 등)이 심한 업종의 **파견규제 합리화** 추진

\* 추가적 고용창출 가능, 내국인 취업기피로 인한 인력난으로 외국인을 다수고용, 향후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종 등

**국정**

○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지원·확산,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및 근로자 만족도·생산성 향상 등 **우수사례\*\*** 발굴·홍보 강화

\* 전환장려금 신설(1인당 월 50만원 한도, 간접노무비·대체인력지원금도 패키지로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 연장(1→2년)

\*\* 적합직무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역·업종별** 설명회 및 채용박람회 실시  
(타깃업종: '14년 병원·은행·제조업→ '15년 서비스업)

-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채용 확대, 공공부문 콜센터 우수사례 확산, 기관별 대표 직무 선정·적용 등 **공공부문이 선도**

\* (공무원) 지방직 1%p 상향, '15~'17년 3,823명 (공공기관) '15~'17년 7,920명 채용·전환  
↳ 공무원 전환형 지원 강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설),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 Rule 3.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 고용보험 20년-산재보험 50년, 새롭게 혁신해 보장성·재취업기능을 높이고, 비공식 부문에 놓인 다양한 고용형태별 보호 및 사과의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 ① 고용·산재보험, 퇴직금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국정  
○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 (월 135→140만원 미만 근로자)하고, 신규가입자 우대방향 개편 검토 추진\*

\* 검토대상: 보험료 지원기간, 지원율 등

○ 실업급여의 보장성 및 재취업 촉진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전용계좌 마련 및 채권 중 일정액(150만원 미만)은 압류 금지토록 조치

- 용역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고용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는 65세 이상 경비·청소근로자 등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 특례 허용

※ 실업급여 수급기간·실업인정 등 「실업급여 종합개편방안」 마련('15上)

국정  
○ 고용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퇴직금 보장 강화

- 건설업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총공사금액 1억원→10억원 미만), 일정기간 근로내역 없는 건설일용근로자\*에도 실업급여 지급

\* 직전 한 달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더해 14일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가입제한 완화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편 추진

- 예술인 특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관계부처 협의)

-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고용보험 적용추진

\* 산재보험: 既적용 6개 직종에 추가해 3개 직종(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당면적용,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임의가입·가입활성화 추진

\* 고용보험: 산재보험 既적용 6개 직종을 중심으로 신규 적용 추진



-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 마련**(외국사례 검토, 노사정 논의 추진)
- 감정노동 관련 고객 응대업무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하여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마련**(‘15下)

※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15下)

- 다양한 고용형태를 고려한 **사회보험\***, **퇴직금\*\*** 보장방안 검토

\* 복수사업장 근무 시간제 근로자: 사업장별 근로시간·소득 합산 사회보험 적용방식

\*\* 두 개 이상의 근로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형태구간별 퇴직금 산정방식

**국정**  
○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실업크레딧, ‘15.7월)

## ② 근로자의 기본소득 보장과 근로조건 보호 강화

**국정**  
○ 소득분배개선분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지속 인상**하고,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감액**(現 10%) 금지

-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2천만원 이하), 미시정 시 사법처리 확행

○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15.7월, 적립금·수수료 일부 지원)

○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및 **대여제도**를 도입, 장기보유 시 세제지원 확대 등 **우리사주 활성화**(관계부처TF)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국정**  
○ **소개료 대리수령, 임금대납** 등 유료직업소개소의 불·편법적 관행 근절

\* ▲취약계층 구직자에 소개요금 징수 금지 ▲사업주가 근로자에 임금을, 소개업체에는 수수료를 직접 지급토록 개선방안 마련 ▲공공무료취업인프라 확충

○ **건설일용 퇴직공제금 인상·확대**(4.2→5천원, 콘크리트 믹스트럭운전사 추가), 무면허 **건설업자** 소속근로자에 **채당금** 지급, **동절기 훈련** 확대(8천명)

- **청소업무** 원청(자치단체, 대학 등)에 대해 휴게, 세면·목욕 등 **위생시설 제공의무** 이행지도를 강화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5억원)

**국정**  
○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고, **가동사업장**의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도 **채당금**(300만원 한도) 지급

\*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지속 실시, 공공발주 공사 입찰과정에서 체불정보 제공

-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체불사업주 대상 **융자요건 완화**(재직자 포함, 5천만원)

**국정**  
○ 업종별 취약분야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6개 지방고용노동청)하여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

\* 빅데이터·디지털포렌식 등 IT기술을 활용해 업무의 정보화·과학화·효율화 추진

### 3 비공식 부문 노동시장의 공식화 추진

국정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직종별 표준계약서\* 마련(2→ 9개 추가제정), 기본적인 종사여건 보호 및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확산
  - \* 표준계약서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약관법상 표준약관 지정, 직종별 분쟁조정절차 활성화
- 가사근로 공식화를 위해 관련 법제정 추진
  -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직접고용, 가사서비스 이용권(쿠폰·바우처 형식), 참여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 포함

◇ 지역·업종 사정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을 체계화하고,  
고용과 복지서비스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국민 체감도 제고

#### 1 지역·산업별 노동시장 지도(map)를 통한 일자리 정책 정교화

- 특정 지역의 산업구조, 고용구조, 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노동시장 전반에 관한 통계·정보를 수집·분석한 노동시장地圖 구축(주요 지역→ 전국으로 확대)
  - \* 고용·산재보험DB 활용, 임금·근로시간 통계확충 등 노동시장 분석기능 강화로 실시간 일자리 모니터링(고용부에 지역산업정책과 신설, 관계부처·연구기관과 협업)
- 중앙·지역단위의 일자리 프로그램과 효과적으로 매칭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RC)·업종(SC) 협의체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확대

\* (예시) 조선업종이 주력인 울산·광양지역의 업황, 고용형태·구조, 전·이직률, 임금·근로시간, 임단협 진행상황 등에 관한 map을 구축하고 주기적 모니터링  
↳ 장년층 특화 고용프로그램 등 매칭(RC, SC를 통한 프로그램 연구·개발·적용), 대규모 고용변동 가능성 등에 고용지원, 노사협의 등 사전 대처

국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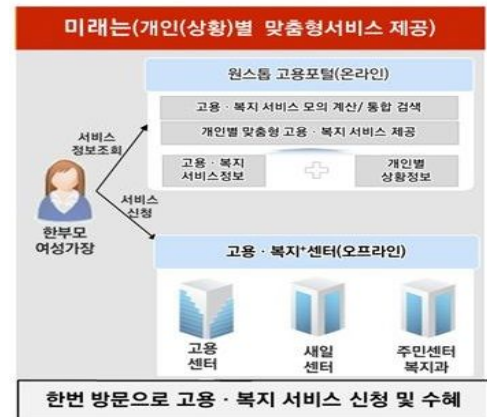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속도감 있게 확산('15년 31→ '17년 70곳)
  - 업무지원망 고도화를 통한 기관별 창구 간 연계 강화, 참여기관\*에 평가가점 등 인센티브 확대,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내실화
    - \* 추가 참여기관 확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1인 비즈니스센터, 장애인공단 등
    - \*\* 고용정보원에 상시모니터링팀 구성, 우수사례 발굴·홍보
  - 일반 고용센터는 취업애로계층의 취업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
    - \* 다양한 직종의 고용센터 상담인력 통합으로 탄력적 배치·전환 등 상담역량 강화

- **국정** 워크넷-사회보장시스템 간 정보연계('15上), 대국민고용·복지포털 구축('15下) 등 **정보망 연계**를 통한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강화

< 고용·복지 정보 연계(예시) >



< 대국민 고용·복지 포털 >



- 워크넷을 중심으로 공공·민간 일자리 정보를 연계하고, 자치단체의 일자리 정보는 지역별 워크넷으로 통합·확산 및 서비스 개선

- **국정** 취업성공패키지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구직자에게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을 부여하여 특화된 서비스의 질 개선 유도

\* (패키지 I) 저소득층 대상, 고용센터 (패키지 II) 청년·중장년층 대상, 민간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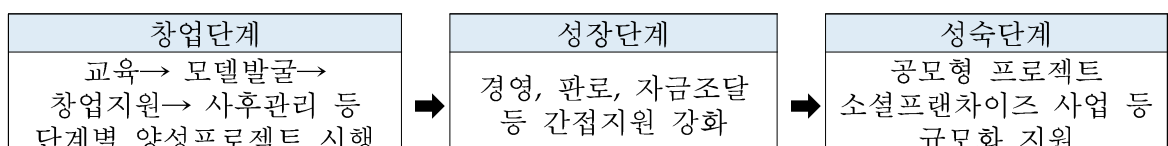
- 참여횟수, 취업여부별 재참여 제한기간 차등 설정, 훈련과정별 취업률에 따른 자부담 비율 차등설정 등을 통해 **취업률 제고**

\* (현행) 중단·기간만료 등인 경우 1년간 재참여 제한 → (개선) ▲불성실 중단자 18개월 참여 제한, ▲3개월 이상 취업경험자는 6개월 참여 제한 등

- 기초수급자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희망리본사업과의 성공적 통합 시행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자에 대한 자활경로 설정 체계 개선)

	고용센터 우선 의뢰(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근로능력 미약자	즉시 취업 가능자	취업 장애요인 단기해소 가능자	취업 곤란자
↓	↓	↓	↓
자활근로 배치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밀착 사례관리 (최장 2개월)	자치단체 이관 (자활근로)

- **국정**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Rule 4. 상생과 협력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성장 확산

### ◇ 기업 간 공정한 협력관계를 촉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2, 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 원·하청간 공정 거래질서 확립(적정 납품단가 보장 등) 및 성과공유를 촉진  
→ 청년일자리 확대

**국정**

###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체제 촉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인센티브로서 **동반성장지수**(동반성장위) 등에 관련 노력\* 반영 추진
  - \* 평가항목에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개선, 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 직접 고용, 원·하청 안전보건 공동협력 노력 정도 등 추가
- 공공건설 발주 시 종합심사낙찰제에 고용·안전 등 **사회적 책임지수 적용 시범사업** 실시(실시 결과를 토대로 평가기준 확정·운용)
- 하청에 부당한 부담전가 등 **불공정한 기업 간 거래 관행** 지속적 개선
- 고용노동부 등 **정부 포상** 시 상생협력 기업 우대(노사문화우수기업 등 선정 시 근로감독 면제, 대출금리 우대 등)

**국정**

### 2 원청 대기업의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복지·훈련·안전 등 투자 촉진

-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대여·설치한 생산설비도 투자에 포함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 \* 기업의 당기소득(사내유보금)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단일세율 1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목적사업인 **성과공유제**를 확대하여 하청 근로자의 임금·복리후생 향상 등 추진(관계부처 협의)
-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협력업체 기금에 출연 시 **비용 일부 지원**
  - 기업 간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매칭방식으로 비용의 일부 지원
  - \* 대기업-하청기업 공동형, 산업단지별·업종별 공동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

### 3 사내하도급 질서 확립

국정

- 원청의 투자 지원\*을 불법파견 징표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파견·도급 판단기준을 명확화(법·지침 마련)
  - \* 산업안전보건 조치, 원·하청 공동직업훈련, 기업복지에 하청근로자 배려 등
  - \* 사용·원청기업 노사협의회에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참여, 의견개진 보장
- 원청의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동일 임금수준 지급 노력 등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보완, 협약체결 확대
  - \* 개별 사업장에 대해 전문가 서포터즈 활용·지원
- 사내하청업체 사업에 대해 원청과 공동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20개 위험장소에 한정→ 원청 사업과 긴밀히 연계된 위험장소로 확대), 벌칙 상향조정
  - \* 이와 함께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제한 강화(인가시 무기한 허용→ 3년마다 재인가, 인가대상 확대)

### 4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

국정

-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인지도 제고 및 워크넷 등을 통한 일자리 정보제공·매칭 강화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청년 지원 확대(제조업 생산직 300만원, 그 외 업종 180만원), 참여기업의 임금수준·성과 고려 등 참여기업 질 관리
  - 중소기업(신성장동력·뿌리산업) 고졸근로자 근속장려금 신설(연 100만원, 최대 3년)
- 실제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탄력적 조정, 중장기적으로는 유휴인력,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등을 종합 고려
  - \* (현행) 전년도 인력부족률 반영→ ('15년) 총규모 55천명 중 1.9천명 추가배분
- 성장가능 업종·기업에 집중적으로 외국인력을 배분
  - \* (업종) 인력부족률↑ 인력부족인원↑ 임금·취업자수↑ ⇒ 20% 추가
  - (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인력양성우수기업, 수출기업 등에 1인 추가배정
- 영세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공동근로 복지기금제도)를 마련·지원하고,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범정부 사업을 패키지로 공모·제공

◇ 노사관계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국정**

## 1 자율과 책임 강화

- 생산적 교섭 문화를 정착시켜 소모적 교섭비용을 감축
  - \* 생산성 목표 초과달성 시 기본인상분에 더하여 일정비율 추가인상분을 지급하는 소위 '생산성 임금협약' 확산 적극 지도
- 배치전환 규제 등 단체협약 중 불합리한 내용의 개선, 부당노동행위·불법파업 근절 등 불합리한 협약·관행을 개혁
- 하청근로자·비정규직을 배려하는 등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노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행동준칙을 마련, 실천선언 등 확산

**국정**

## 2 참여와 협력 증진

- 중앙, 지역, 업종, 현장 단위의 중층적 대화 활성화
  -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화와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위원 참여, 의제 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대화기구로 정립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지역인적자원위원회(RC)를 설치·운영하여 산업구조·노동시장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정부지원 매칭 활성화
    - \* 국가인적자원개발권소사업(2,296억원) 과정승인 등을 준비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부여
    - \* 지역 내 전문가 연구그룹인 지역고용전략개발포럼을 구성하여 정책개발을 뒷받침
  - 노사정위원회 산하 업종별위원회 설치, 특정산업 밀집 자치단체 및 업종별협의회(SC)와 협력하여 인력수급 동향, 핵심인력 육성방안 등 모색
  - 사업장 내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균형 있게 대표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개편(정규직 중심→ 사업장 내 파견·사내하도급 등 근로자 참여 확대)
- 각종 정부위원회에 노사단체 참여를 활성화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견수렴 및 소통 강화
-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 결정·변경에 있어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자대표 관련 규정 개선



## IV. 추진방안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개선, 내수활성화 등 우리경제의 선순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임. ...쉽지는 않지만 노사간에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야 달성할 수 있음. ... 앞으로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계속 대화하고 의견을 모아 나간다면, 국민들께서 원하는 해법을 강구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대통령님 말씀 ('15.1.6. 국무회의)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어렵고, 노사정 공동의 노력 필요
-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노사정 합의('14.12.23)를 바탕으로 실천적 과제에 대한 후속 합의를 지속 도출
  - \* 5대 의제, 14개 세부과제
  - 우선과제: '15.3월까지 집중 논의→ 필요한 제도개선 추진(연내)
  - 계속과제: 보육·능력중심 등 분야별 이슈 합의 도출, 임금체계·근로시간 등 남은 관행 개선(공동선언, 모범사례)
-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토대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
  - 공청회·토론회(노사정합), 언론홍보, 인식조사 등 단계별 공론화 진행
- 고용부 주관의 관계부처TF를 운영하여 노사정 논의 뒷받침
  - 노사가 제기한 이슈에 대한 정책대안 모색(공공부문 선도 등)

- ❖ 세부과제별 대화 및 합의 도출을 지속 추진
- ❖ 노사정이 함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해 새로운 고용생태계 조성

세부 과제		관계부처	추진일정
①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1. 직무·성과·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지원			
▪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고용부	'15.상	
▪ 장년친화적 인사제도 개편 지원	고용부	'15.상	
▪ 업종별 임금체계 모델 개발	고용부	'15.상	
▪ 주요 대기업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형성·지원	고용부	'15.상	
▪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	고용부	'15.상	
▪ 임금체계 개편 서포터즈 운영	고용부	'15.상	
▪ 임금체계, 직급·직종별 임금정보 구축·제공	고용부	'15.하	
▪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고용부	'15.상	
▪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 선도	기재부, 인사처	'15.상	
▪ 공공부문 임금체계개편 T/F 운영	고용부, 기재부	'15.상	
2. 장시간근로 개선			
▪ 근로시간 총량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특례업종의 합리적 조정)	고용부	'15.상	
▪ 근로시간 적용제외 부문 개선방안 마련	고용부	'15.하	
▪ 교대제 개편 행·재정적 지원	고용부	연중	
▪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고용부, 행자부, 인사처, 여가부, 문화부 등	연중	
▪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고용부	'15.상	
▪ 재량근로 대상 업무 추가	고용부	'15.상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고용부	'15.상	
▪ 근로시간규정 적용배제 관리·감독자 기준 명확화	고용부	'15.상	
▪ 포괄임금제 개선·운용 매뉴얼 마련	고용부	'15.상	



세부 과제		관계부처	추진일정
3. 채용·고용종료 단계에서의 고용관행 합리화			
▪ NCS기반 능력중심인사관리 시스템 확산	고용부,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연중	
▪ 新직업자격 설계 및 확산	고용부, 교육부	연중	
▪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사업 실시	고용부, 교육부	연중	
▪ 대학형 일학습병행제 시범 도입	고용부, 교육부	연중	
▪ 특성화고·(전문)대학과 도제기업 간 학습근로자 채용 네트워크 구축	고용부, 교육부	연중	
▪ 일학습병행제 확산	고용부,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연중	
▪ 경영상 해고 관련 절차적 요건 강화	고용부	'15.상	
▪ 일반적 근로계약 해지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	고용부	'15.상	
▪ 퇴직예정자 대상 전직지원 강화	고용부	'15.상	
▪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 명확화	고용부	'15.상	
▪ 기간제 근로자의 구제명령 범위 확대	고용부	'15.상	
②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을 방지			
1. 불합리한 차별 개선			
▪ 징벌적 손해배상명령제도 활성화	고용부	연중	
▪ 노동위원회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고용부	연중	
▪ 노동조합에 조합원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 부여	고용부	'15.상	
2. 고용형태별 당사자의 애로 해소를 통해 남용 방지			
▪ 기간제·파견·시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부	연중	
▪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	기재부, 행자부, 교육부 등	연중	
▪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시행	고용부	'15.상	
▪ 사용기간 연장 및 계약해지 시 이직수당 지급 검토	고용부	'15.상	
▪ 계약갱신 횟수 제한	고용부	'15.상	
▪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확대	고용부	'15.상	

세부 과제		관계부처	추진일정
3. 고용형태별 사용관행 개선			
▪ 파견계약 명확화 및 표준계약서 제정·확산	고용부	'15.하	
▪ 종합고용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고용부	'15.하	
▪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태점검	고용부	'15.상	
▪ 안전·보건관리자 등 국민의 생명·안전 핵심 업무 관련 기간제·파견 근로자 사용제한 제도 마련	고용부	'15.상	
▪ 안전보건관리 위탁 제한 관련 노사정 실태조사	고용부, 산업부	'15.하	
▪ 파견제한 합리화(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대상)	고용부	'15.상	
▪ 업종별 파견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고용부	'15.상	
▪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 연장(1→2년) 시행	고용부	'15.하	
③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1. 고용·산재보험, 퇴직금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및 신규가입자 우대방향 검토	고용부, 복지부	'15.상	
▪ 65세 이상 경비·청소근로자 실업급여 적용 특례허용	고용부	'15.상	
▪ 건설업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방안 마련	고용부	'15.상	
▪ 일정기간 근로내역 없는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고용부	'15.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고용부	'15.상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추진	고용부	'15.상	
▪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	고용부	'15.상	
▪ 출퇴근재해 보상방안 대안 검토 및 노사정 협의 추진	고용부	'15.하	
▪ 시간제 근로자 관련 사회보험·퇴직급여 제도 정비	고용부, 복지부	'15.하	
▪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지원	고용부, 복지부	'15.상	
▪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전용계좌 마련	고용부	'15.상	

세부 과제		관계부처	추진일정
<b>2. 근로자의 기본소득 보장과 근로조건 보호 강화</b>			
▪ 최저임금 지속 인상, 단순노무직에 대한 감액금지 및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고용부	'15.상
▪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준비		고용부	'15.상
▪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금 인상·확대		고용부, 국토부	'15.상
▪ 무면허 건설업자 소속 근로자에 채당금 지급		고용부	'15.상
▪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훈련 확대 실시		고용부	연중
▪ 청소근로자 등의 위생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		고용부	연중
▪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 및 제재 강화		고용부	연중
▪ 소액 채당금 지급 및 체불사업주 용자조건 완화		고용부	'15.상
<b>3. 비공식 부문 노동시장의 공식화 추진</b>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고용부	'15.상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직종별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확대		고용부	'15.하
▪ 가사근로 공식화를 위한 법제정 추진		고용부	'15.상
<b>4. 지역·산업별 노동시장 지도를 통한 일자리 정책 정교화</b>			
▪ 노동시장 지도 구축		고용부	'15.3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산		고용부	연중
▪ 워크넷-사회보장시스템 간 정보연계		고용부, 복지부	'15.상
▪ 대국민 고용·복지포털 구축		고용부, 복지부	'15.하
▪ 취업성공패키지 전달체계 개편		고용부, 복지부	'15.하
▪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고용부	'15.상
<b>④ 상생과 협력의 동반성장 확산</b>			
<b>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체제 촉진</b>			
▪ 동반성장지수 체감도 평가항목 반영 추진		고용부, 동반성장위	'15.하
▪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심사기준 반영 및 우대		고용부	'15.하
<b>2. 원청 대기업의 중소기업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훈련·안전 등 투자 촉진</b>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 제외		산업부, 기재부	'15.상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사용		산업부, 기재부	'15.상

세부 과제	관계부처	추진일정
▪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 책임지수 적용 시범사업	기재부, 고용부	연중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고용부	'15.하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고용부	'15.상
<b>3. 사내하도급 질서 확립</b>		
▪ 파견·도급 구별 기준 명확화	고용부	'15.하
▪ 사내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보호 가이드라인 보완 및 협약체결 확대	고용부	연중
▪ 공동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고용부	'15.하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제한 강화	고용부	'15.하
<b>4.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b>		
▪ 강소기업 인지도 제고 및 일자리정보 제공 강화	고용부, 산업부, 중기청	연중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청년지원 확대 등	고용부	'15.상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신설	고용부	'15.상
▪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규모 탄력적 조정	고용부	'15.상
▪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 패키지 지원	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15.하
<b>5. 노사의 자율과 책임 강화</b>		
▪ 생산적 교섭문화 정착	고용부	연중
▪ 부당노동행위 예방 지도·점검	고용부	연중
▪ 사회적 책임에 관한 행동준칙 마련	고용부	'15.상
<b>6. 노사의 참여와 협력 증진</b>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우선과제 논의	고용부, 기재부 등	'15.3월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설치·운영	고용부	'15.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 추진	고용부	'15.상
▪ 노사협의회 개편 및 근로자대표 규정 관련법 개정 추진	고용부	'15.상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

**대 ·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 목 차

I. 추진 배경 및 성과 .....	33
1. 추진 배경 .....	33
2. 지난 2년간의 성과 및 평가 .....	34
II. 핵심과제 추진계획 .....	38
1. 불공정거래 빈발분야 시장감시 강화 .....	39
2.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	42
3. 신고·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	45
4.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	47
III. 과제별 추진일정 .....	50





## 1. 추진 배경

□ 중소기업은 기업 수, 종사자 비중 등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

-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은 99.9%(3,351천개/3,354천개), 종사자 비중은 87.7%(13백만명/15백만명)에 달함(중소기업관련통계, 중기청, '14.6월)

□ 특히,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대기업과의 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 (하도급 분야) 중소기업 중 하도급업체 비율이 절반(50.3%)에 달하고, 하도급업체 매출액 중 원사업자 납품액 비중도 매우 높은 수준(83.2%)

\*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중기청, '13.12월)

- (유통 분야) 많은 납품업체들(39,349개)이 소수의 대형유통업체(64개)와 거래(공정위, '14.12월)

\*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 주요 유통분야 매출액('13년): 85.7조원

- (가맹 분야) 퇴직자들의 주요 창업경로인 가맹점도 가맹본부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위

\* 가맹분야 사업자 현황(공정위, '14.12월): 가맹본부 3,482개, 가맹점 194,199개

□ 일부 업종의 경우, 대기업과 거래하는 비계열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

\*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A 완성차 사례, 산업연구원)

- 계열 부품회사: 10.1%('10년)→9.3%('11년)→10.1%('12년)→9.3%('13년)

- 비계열 부품회사: 5.1%('10년)→3.9%('11년)→3.7%('12년)→3.3%('13년)

□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 구축,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은 반드시 시정 필요

## 2. 지난 2년간의 성과 및 평가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신규 제도 도입, 작동실태 점검, 주요 애로분야 집중조사 및 시정 등 적극 노력

### <신규 제도 도입>

- 3배 손해배상제 등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을 위한 제도를 도입

#### < 주요 신규 도입 제도 >

구분	내 용	시행일
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하도급법 개정) * 기술유평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평	'13. 11. 29.
	중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 )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 )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예: 민원처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약정	'14. 2. 14.
유통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13. 10. 8.
	특약매입거래시 각종 비용분담 기준 마련( " )	'14. 7. 14.
가맹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가맹사업법 개정)	
	심야영업 강제 금지( " )	
	매장리뉴얼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등( " )	'14. 2. 14.
	예상 매출액자료 서면제공 의무화( " )	

### <제도 작동실태 현장점검>

-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현장 실태점검\*\* 실시(6개월 주기)

\* 사업자단체(중기중앙회, 전문건설협회, 소프트웨어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학계, 정부기관(공정위, 중기청) 등 각계 대표 21명(민간 18명, 정부 3명)

\*\* 기업 방문(50개사), 간담회 개최(16회), 설문조사(6,217개사) 병행 실시('14.5월~7월)

- 새로 도입된 제도의 인지도, 제도 도입 전·후 대비 거래 관행의 변화 정도 등을 점검

## <중소기업 애로분야 집중조사 및 시정>

- (하도급 분야) 대금 지급실태를 집중점검(3회)하여 128개 업체의 불공정행위(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적발 등
  - (유통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시식행사 비용전가행위(149개 납품업체) 및 경영정보\* 요구행위(180여개 납품업체) 등 불공정행위 적발
    - \* 경쟁 유통업체에 대한 상품공급가격, 마진율, 기간별 매출액, 판매촉진 행사계획 등
  - (가맹 분야) 화장품·커피 분야에서 가맹본부의 관측비용 전가, 가맹금 미예치 등 불공정행위 적발
    -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305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여 가맹점주 피해를 사전예방
  - (대리점 분야) 식품·도시가스·화장품 분야에서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거래지역·상대방 제한, 제품구입 강제 등) 적발
    - 대리점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법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대리점 고시’ 제정(‘14.5월 시행)
- 민·관 합동 T/F의 1차 현장점검 결과, 제도 도입 이후 불공정행위 경험 업체 수가 평균 30~40% 감소하는 등 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하도급 분야>

- (인지도) 수급 사업자의 61.4%가 도입된 제도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
- (3배 손해배상제 대상 확대) 부당단가인하 발주취소·반품·기술유용 등 4대 고질적 불공정거래 경험 중소기업 수가 32.9% 감소(350개→235개)
-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권) 원재료 가격이 인상된 업체 중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청한 수급 사업자는 52.6%이고, 그 중 82.2%가 수용
- (부당 특약 금지) 부당 특약을 경험한 업체 수가 38.7% 감소(194개→119개)하고, 48.8%는 거래 관행의 개선을 체감

### <유통 분야>

- (인지도) 납품업체의 91.5%가 개선된 판매장려금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변
- (부당한 판매장려금 징수) 경험 중소기업수가 78.9% 감소(242개→51개)
  - 특히 대규모 유통업체에게 기본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는 81.6% 감소(234개→43개)
- \* 기본장려금은 납품업체 상품의 판매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획일적으로 수령한다는 점에서 신규제도 도입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
- 총 판매장려금(1조4,680억원) 중 기본장려금(1조1,793억원) 비중은 약 80%('12년 기준)

### <가맹 분야>

- (인지도) 편의점의 93.8%가 '심야영업 강제' 금지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
-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가맹본부의 평균 위약금 부과 금액이 33.4% 감소(1,211만 원→806만원)
- ('심야영업 강제' 금지) 제도 도입 이전에는 전혀 허용되지 않던 심야영업 시간 단축이 요건 충족시(6개월간 심야시간대 영업손실 발생) 대부분 허용
  - \* '14.2월~12월 중 996개의 편의점에 대해 심야영업 중단이 허용
- ('매장리뉴얼 강요' 금지) 패스트푸드 매장리뉴얼 비용이 평균적으로 26.3% 감소(3,695만원→2,724만원)
- (정보공개서 및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제공 비율이 각각 98.5%, 78.1%로 높게 나타남

### <대리점 분야>

- (밀어내기) 65.8%의 대리점은 밀어내기 관행이 개선되었고, 26.4%의 대리점은 동 관행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
  - \* 서울시가 유제품 대리점(292개)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14.12월)

- **(반품거부)** 반품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반품비용을 대리점으로 전가하는 관행의 경우 49.7%의 대리점이 개선되었고, 38.6%의 대리점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
-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판촉사원 인건비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관행에 대해 33.6%의 대리점이 개선되었고, 52.4%의 대리점이 경험이 없다고 응답
- 그러나, 불공정 거래관행이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일부 남아 있으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도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
-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관계가 지속되는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여전
  - 특히, 하도급 대금 문제가 가장 심각하며 경기회복 지연으로 악화 우려
  - \* 전체 제보 중 48.1%가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서면실태조사, '14.5월)
- 대기업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독립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차별·배제 행위 지속
  - 독점력을 남용하여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는 행위, 대기업이 부당하게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중소기업의 진입기회를 차단하는 행위, 공기업이 불공정행위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행위 등
  - \*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기간사업자가 통신망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창출한 시장을 잠식(시정조치, '14.11월)
-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하여 불공정행위 신고를 기피하고, 그에 따라 불공정행위 적발·시정에 한계
  - \* 중소기업 중 49.3%가 불공정행위 대책 1순위로 신고자 비밀보장을 요구 (중소기업중앙회, '14.11월)
-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
  - \* 동반성장지수의 중소기업 체감도(협력관계 분야) 점수는 47.6점('12년)→52.6점('13년)으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동반성장위, '14.6월)

⇒ **분야별 맞춤 처방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

## 정책 비전 · 목표 · 과제

비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목표

대 ·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과제

불공정거래  
빈발분야  
시장감시  
강화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  
정착

·유통·가맹·  
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

·독점력 남용  
및 기술유용  
감시 강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시정

신고·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보복 우려없이  
신고·제보  
가능한 여건  
조성

·신규 도입제도  
현장점검 및  
체감도 제고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불공정관행  
자율개선  
유도(공정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산업부)

·상생협력  
지원시책  
확대(중기청)

## 1. 불공정거래 빈발분야 시장감시 강화

### 가.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정착

□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등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 및 시정 추진

○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이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

\* 민원 빈발분야(예시): 건설,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등

○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금회수 불만이 주로 제기되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조사하고,

- 윗 단계에서의 대금미지급이 그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 상위업체를 조사하는 새로운 조사방식 도입(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

\* 중소 하도급업체와의 간담회 결과, 하도급대금 회수 관련 애로는 주로 1~2차 협력업체 단계에서 발생

#### 하도급대금 관련 주요 법위반 유형

-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
-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 공공부문부터 대금지급 공정화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 활성화 적극 추진

\* 공공기관과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

- 원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 계좌로 지급하고, 발주기관은 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공공기관·지자체 등 공공발주자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 계약·대금지급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기재부)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지자체 합동평가(행자부)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산업부)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실적 평가 대상 확대(행자부·산업부·조달청 협업)

\* (종전) 시설공사만 평가 → (향후) SW용역까지 확대

- 각 기관에서 조달청에 계약요청하는 건에 대해 각 기관의 동의를 얻어 ‘하도급지킴이’ 이용 조건부로 계약 대행(조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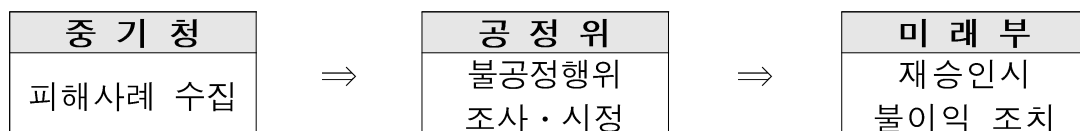
## 나. 유통·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 <유통 분야>

-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된 반면,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TV홈쇼핑 분야 집중점검 및 시정 추진

-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 조사·시정 및 예방을 위해 부처간 협업체계인 「(가칭)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정부합동 T/F」 구축

<정부 부처간 협업체계>



- TV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점검하여 범위반시 엄중제재(상반기)

주요 감시대상 불공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시작 후 2시간 이내 주문에 대한 판매촉진비용(사은품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2시간 이후 주문에 대해서만 납품업체와 5:5로 분담</li> <li>-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li> <li>- 일방적인 방송 취소·변경 및 상품 판매대금 지연지급</li> <li>-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액이 TV홈쇼핑이 설정한 목표에 미달한 경우에도 판매목표액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수취</li> <li>- TV 홈쇼핑사가 지정하는 특정 택배사 이용을 납품업체에게 강요</li> <li>- 소비자가 ARS 또는 휴대폰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경우 가격할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li> </ul>



## □ 대형마트·백화점·아울렛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 (대형마트·백화점) 그간 대규모유통업 분야에 새로 도입된 제도를 위주로 거래관행 개선 여부 및 관련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

\* 중점 점검사항(예시) : 기본장려금 폐지에 따른 각종 비용전가 행위, 부당한 판촉사원 파견요구, 특약매입거래시 비용분담기준 준수 여부 등

- (아울렛)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업영역을 아울렛 분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 감시·시정

\* (예) 납품업자에게 지역 중소유통업자와의 거래를 제한, 최저매출보장조건 강요 등

## <가맹 분야>

## □ 현장실태점검 분석결과 등을 기초로 중점감시 분야(업종·범위반 행위 유형)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직권조사 실시

- 가맹점주들의 민원다발 분야 및 가맹사업법상 규제 신설에 대응한 가맹본부의 부담 전가(풍선효과) 가능성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

\* (예) 가맹본부가 계약에 근거없는 판촉비용을 가맹점에게 전가, 계약갱신 조건으로 인테리어 교체 강요 등('14년 가맹점 간담회시 주요 지적사항)

- 단기간에 가맹점이 급증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  
- 허위·과장 정보를 통한 가맹점 모집 등 피해발생 가능성에 선제적 대응

## <대리점 분야>

## □ 불공정 혐의가 집중 제기되는 업종에서 거래상지위가 우월한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확인시 엄중조치

-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 고시\*를 통한 법집행을 강화하여 제품 밀어내기, 판촉비 전가, 판매목표 강제 등 각종 불공정행위 차단

\*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14.5월 제정)

- 대리점의 불공정행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본사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

\* 보복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14.11월)

---

## 2.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

### 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감시 강화

□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및 계열사 특혜제공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공시 및 내부거래실태 주기적 점검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시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상·하반기에 각각 철저히 점검

\*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조건 등을 공시해야 함

-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본격적인 시행('15.2월)에 따라 법적용대상 기업의 거래실태 상시 모니터링

\*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내부거래내역 및 규모 등 전반적인 내부거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반기별)하여 기업들의 행태 감시

- 새로 시행되는 법규정과 관련한 법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 교육 실시(분기별)

-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지속적 감시·시정

\* ①계열사에 대해 상품·용역·대여금·인력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독점력 남용 및 기술유용 감시 강화

□ 시장의 독과점화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ICT 분야 감시 강화

- (모바일·플랫폼 분야) 시장 특수성, 국제적 법집행 동향 등을 고려하여 모바일 SNS·OS 사업자 등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모바일·플랫폼 분야는 기술 선도자가 시장을 쉽게 독과점하고, 금융·콘텐츠 등 인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콘텐츠 등 인접시장에 직접 진출할 경우 경쟁제한 이슈 발생 가능

○ (SW 및 지식재산권 분야) 독과점적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집중 감시

\*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은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데 상당한 전환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

-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행위,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조치

\* (예)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지식과 경험, 기술적 성과를 부당하게 특허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부당하게 실시 허락된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보완

○ 기술유용 관련 정부기관간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효과적으로 감시·예방

\*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공정위, 경찰청, 중기청, 특허청) 간 정보 교류 및 협조 등을 강화하고자 MOU 체결·시행('14.12.18.)

- MOU 체결 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사례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 계획 수립시 적극 활용

○ 기술보호 통합포털(www.ultari.go.kr)\* 개선 및 홍보 확대(중기청)

\*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정책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

- 유관기관별로 산재한 정보를 상담·신고·교육 등 분야별로 통합 제공

\* 현재는 각 부처·기관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정보탐색에 애로

- 하도급 기술유용 관련 법·제도와 조치사례 등을 알기 쉽게 소개·홍보 하여 기술유용 예방 강화

## 다.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시정

□ 공공부문 전반의 불공정행위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을 여타 국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 '14년말 기준 국가공기업은 302개, 지방공기업은 398개

○ 상반기 중 서면조사 등을 통해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 후, 하반기 중 직권조사를 실시

중점 감시 대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열회사, 퇴직자 설립회사 등과 거래하면서 높은 낙찰률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li> <li>- 계열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이권을 취하게 하는 행위</li> <li>- 공사대금 부당 회수·감액행위</li> <li>-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업무대행 강요행위</li> <li>- 공기업연장시 간접비, 공사정지시 지연보상금 등 각종 비용 미지급행위</li> </ul>

○ '14년 조사를 실시한 공기업 등에 대한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마무리

\* 주요 국가공기업(7개) 및 공공재에 준하는 기간사업 영위업체(27개) 중 6개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내 사건처리 완료 추진

□ 조사과정 중 발굴한 경쟁제한적 또는 불합리한 관행·제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 추진

\* ('14년 발굴사례) 국가계약법 규정을 남용하여 대가지급 기한을 일률적으로 늦추는 부당한 지급관행 등

### 3. 신고·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 가. 보복 우려없이 신고·제보 가능한 여건 조성

##### <제보 단계>

- ☐ 중소기업이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익명제보 처리 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에 제보자의 인적사항 입력없이 제보할 수 있는 “익명 불공정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 실시(1/4분기)
    - \* 제보자가 자신의 신원 유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15개 업종별 중기협동조합에 설치된 익명제보센터\*를 다른 업종(예: 유통, 소프트웨어 등)으로 확대 추진(상반기)
    - \* 회원사들의 불공정하도급 경험사례를 협동조합이 파악하여 공정위에 직접 제보('14.10월부터 플라스틱, 금형, 단조, 피복 등 분야에서 운용 중)
  - 익명제보 채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익명제보된 사건도 기명 신고사건에 준하여 처리
    - \* 현재 익명제보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측면, 무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건절차규칙(제12조)에 따라 대부분 심사불개시 처리
- ☐ 서면실태조사\* 협조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대상에 추가하고,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하도급법 개정안 국회제출, 3/4분기)
  - \* 매년 5천개 원사업자, 9만5천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실태 및 법위반 혐의 파악
  - \*\* 현행 과태료 상한액(5백만원)을 상향 조정

##### <조사 단계>

- ☐ 조사내용을 제보된 특정 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포괄 조사하는 등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제보자의 신원유출 방지
- ☐ 담당 조사공무원이외의 제3자가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도록 공정위 내부시스템에 신고인 가명 처리(상반기)

## <후속 단계>

### ☐ 신고·제보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탈법행위 점검 강화

- 시정조치 이후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발주량 축소, 거래 중단 등) 및 탈법행위\*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적발시 엄중제재

\*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후 다시 대금을 회수하는 행위 등

- 시정조치 이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2~3회)하여 보복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 나. 신규 도입제도 현장점검 및 체감도 제고

###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 도입된 제도의 작동실태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6개월마다 지속점검하고 결과를 공개

- 특히, 금년부터는 시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점검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각각 차별화하여 실시

### ☐ (상반기)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여부 및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직권조사에 적극 활용

- 중점 점검분야

- ▶ [하도급] 부당특약 실태 조사
- ▶ [유 통]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행위 및 풍선효과 점검
- ▶ [가 맹] 편의점 심야영업 허용 실태 및 영업지역 설정 실태점검

### ☐ (하반기) 새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1년 전·후 거래관행 변화에 대한 체감도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

- 각 제도별 인지도, 1년 전·후 각각의 불공정행위 경험유무 등 전반적인 거래관행의 개선 정도 등을 점검

## 4.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 가. 불공정관행 자율 개선 유도(공정위)

####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협약 확산

\* 협약체결 기업 수: 145개('12년) → 177개('13년) → 192개('14년)

- **(수평적 확산)** 아직 협약체결 실적이 전혀 없는 **가맹, 광고업종**의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체결을 장려(가맹, 광고업종 협약평가기준은 '14년 기 마련)
  - 아울러, 현행 제조업종 평가기준을 세분화(전기·전자, 기계·자동차 조선, 화학·비금속·금속)하여 **협약평가의 현실정합성 제고**
- **(수직적 확산)** 중소기업과 직접 하도급거래를 하는 **1차 협력사**(중견기업) 대상으로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내실 있는 이행을 유도
- **(우수사례 확산)**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자율준수문화 확산 및 우수업체의 평판 제고

#### □ 자진시정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는 경우 경고조치는 하되,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진시정 활성화 유도
  - \* 현행은 자진시정시 경고조치 및 벌점 0.5점 부과
  - 다만,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 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급법시행령 개정, 상반기)

#### □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 **(분쟁조정 범위 확대)** 공정위 조사시정에 앞서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도급 공정화지침 개정, 상반기)
  - \* 매년 1,100여건의 하도급 분쟁조정(75%이상이 대금관련) 접수(성립율: 87%)
  - \*\* (예) 제조: 매출액 5천억→7천억 미만, 용역: 매출액 5백억→1천억 미만, 건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30위 미만
- **(분쟁조정 역량 제고)** 분쟁조정 모범·실패사례 공유를 위한 포럼 개최(분기별) 및 우수 분쟁조정사례 선정 등

## 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산업부)

- (상생결제시스템<sup>\*</sup>) 전체 참여은행과 주요 대기업간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3월)을 통해 본격 시행하여 **이행율 제고 및 참여업체 지속 확대**

\*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대기업 발행 결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10개 대기업 및 7개 은행 참여)

- (동반성장밸리<sup>\*</sup>)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 플랫폼인 「동반성장밸리」 구축·확산<sup>\*\*</sup>

\* 대기업 동반성장사업을 플랫폼에 자료구축(DB)한 후 기존 협력사외 창업·중소기업에 개방하여 참여 유도

\*\* 참여기업 확대를 통한 ‘동반성장밸리 시범사업 출범식’ 추진(7월)

- 코디네이터 공모, 동반성장밸리DB 구축, 기술협약 가이드라인 도입 등 동반성장밸리 세부사업을 통해 이행 기반 마련

- (산업혁신 3.0<sup>\*</sup> 확산) 2·3차년도 재참여 중소기업<sup>\*\*</sup>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혁신 프로그램<sup>\*\*\*</sup> 구성을 통해 '18년까지 1만개 중소기업 지원

\* 대기업 1차 협력사 중심의 중소기업 생산성혁신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

\*\* 연간 2,000여개 기업지원 / 불량률 축소 등 성과지표 52% 개선

\*\*\* (예) (1차년도) 현장 정리정돈 및 업무프로세스 정립 → (2차년도) 핵심공정 기술 개발 및 자동화 → (3차년도) ICT 융합 생산 관리(공장자동화)

- 참여기업의 생산기술 분야 지원 및 1·2차년도 계속 참여기업의 혁신활동을 생산관리 분야로 확대하여 고도화된 혁신활동 추진

- (다자간 성과공유제<sup>\*</sup>) 자율추진 협약식(4월), 업종별 모델 개발(7월), '15년 이행결과 동반성장지수 가점 배정('16년, 동반위) 등 확산 추진

\* 대기업과 1차기업간 1:1 계약을 발전시켜, 대기업에서 2·3차 협력사까지 1:多 계약으로 확대하여 여러 단계의 성과공유제를 통합적으로 관리



## 다. 상생협력 지원시책 확대(중기청)

### □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 동반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 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 등 현지거점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현지화 지원

\* 롯데마트의 경우 한국상품 전용관 추가('13년 인니 → '14년 중국(북경)·베트남(호치민))

\*\* 11번가(SK플래닛)에서는 해외 쇼핑몰(중국, 인니 등 6개) 입점 지원 등

- MAMA(CJ) 등 대기업의 한류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중기제품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14년 91개사 → '15년 200개사)

\* VIP 말씀(홍콩 MAMA 영상메시지, '14.12.3.): 문화를 통해 창조 산업을 발전시킨 “글로벌 창조경제의 모범 사례”로 높이 평가

### □ 중소기업 R&D제품 구매 확산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공공기관을 확대하여 기술개발 성공제품의 다양한 수요처 확보

\* 예산: 815억원('14년)→915억원('15년), 참여 공공기관: 100개('14년)→110개('15년)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국산화 신기술 개발이 필요한 대기업 (공기업 포함)과 정부가 공동으로 중소기업 R&D 자금·판로 지원

\* 조성규모: 6,300억원('14년)→7,000억원('15년), 참여기관: 53개('14년)→60개('15년)

#### 사례

(주)효성전기 (모터개발 기업)

- '09년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Global Blower Motor' 개발 → 400억원 매출('11~'13년 누계 지원금 대비 148배)



### □ 대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

- 대기업 구매실적을 동반성장지수(가점)에 반영(6월)하고, 희망나눔 캠페인(협력기업, 자선단체 대상) 등 자발적 동반성장 참여 유도
- 기업 및 정부의 구매 확대, 개인 구매시 할인률(5%) 유지 등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구매목표: '14년 3,600억원 → '15년 4,000억원)

### Ⅲ

### 과제별 추진 일정

과제명	201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b>1. 불공정 거래 빈발 분야 시장감시 강화</b>				
가.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정착				
▶민원 빈번 업종 대상 조사				
▶하도급지킴이 법적근거 마련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 평가 대상 확대				
▶하도급지킴이 이용조건부 계약 대행				
나. 유통·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정부합동 T/F 구축				
▶TV홈쇼핑 분야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시정				
▶대형마트·백화점·아웃렛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가맹 분야 중점감시 분야 선정 및 직권조사				
▶대리점 분야 불공정혐의 업종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b>2.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b>				
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감시 강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점검				
▶내부거래실태 파악 및 교육				
나. 독점력 남용 및 기술유용 감시 강화				
▶ICT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				
▶기술보호 통합포털 개선 및 홍보 확대				
다.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시정				
▶여타 국가공기업·지방공기업 조사 및 시정				
▶'14년 조사 공기업 사건처리 마무리				
▶경쟁제한적 또는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 추진				
<b>3. 신고·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b>				
가. 보복 우려없이 신고·제보 가능한 여건 조성				
▶익명 불공정제보센터 설치				
▶익명 제보센터 확대				
▶보복조치 금지규정 신설(하도급법 개정안 국회제출)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				
▶공정위 내부시스템에 신고인 가명처리				
▶보복조치·탈법행위 점검 강화				
나. 신규 도입제도 현장점검 및 체감도 제고				
▶현장 실태조사				
▶설문 실태조사				

과제명	201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b>4.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b>				
가. 불공정관행 자율 개선 유도				
▶ 공정거래 협약 확산				
▶ 자진시정시 벌점 미부과(하도급법시행령 개정)				
▶ 분쟁조정 대상범위 확대(하도급 공정화심사지침 개정)				
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산업부)				
▶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				
▶ 동반성장밸리 시범사업 출범식				
▶ 산업혁신 3.0 확산				
▶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				
다. 상생협력 지원시책 확대(중기청)				
▶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 동반진출 지원				
▶ 중소기업 R&D 제품 구매 확산				
▶ 대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				

“중소기업인들이 거래관행 개선의  
성과를 체감하는 元年을 만들겠습니다.”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NEWSTAY정책

국 토 교 통 부





## 목 차



I. 추진배경 .....	57
II.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전략 .....	59
III. 기업형 임대 육성 방안 (1) 규제 재설계 .....	60
기업형 임대 육성 방안 (2) 택지 지원 .....	63
기업형 임대 육성방안 (3) 금융지원 .....	64
기업형 임대 육성방안 (4) 세제지원 .....	65
기업형 임대 육성방안 (5) 인프라 구축 .....	66
IV. 기대효과 .....	67





## I. 추진배경

-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이동함에 따라, 자가점유율\*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

\* 자가점유 비중(%): (06년) 55.6 (08년) 56.4 (10년) 54.3 (12년) 53.8 (14년<sup>㉔</sup>) 53.6

- 그런데, 임대주택 공급은 저금리,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

\* 월세는 대부분 보증부월세 형태이며, 순수월세는 1~2인 가구용 오피스텔 등에 국한

- '12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임차가구 중 월세 가구 비중(49.9%; 보증부 42.9%, 순수 7.0%)이 전세가구 비중(50.1%)보다 낮았으나,

- '14년 월세비중(55.0%, 보증부 50.2%)이 전세비중(45.0%)을 크게 초과

- '14년 11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 중 보증부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0%로, '11년 같은 기간 대비 8.0%p 증가

\* 전월세거래 통계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순수월세 통계는 미포함

-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증가

- 전세 < 보증부월세 < 월세 順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

\*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14 주거실태조사): (전세) 10.1% (보증부) 14.0% (월세) 18.3%

- 잦은 이사\*로 인해 주거 안정성이 약화

\* '14년 11월 누계 전월세거래는 134만건으로, '13년 동기 126만건 대비 6.9% 증가

- 주거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록(제도권)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히 확보될 필요

- 그러나, '13년 기준으로 약 800만 임차가구(총 1,800만 가구의 44.4%) 중에서 20.1%인 161만 가구만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

\* 일본은 전체 임대주택(총 1,445만호, '13년)의 80%를 전문기관이 위탁 관리

□ 특히, 등록 임대주택 중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재고는 '06년 49만호에서 '13년 97만호로 98.0% 증가한 반면,

-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부문의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같은 기간 동안 84만호에서 64만호로 오히려 23.8% 감소\*하였음

\* 민간부문은 잦은 분양전환(최근 5년간 연 3.4만호) 등으로 등록임대 재고 감소

구 분	'06	'08	'10	'12	'13
임차가구	656만 가구	667	747	769	800 <sup>e</sup>
등록임대	133만 가구	134	139	148	161
(공공부문)	(49만 가구)	(62)	(76)	(89)	(97)
(민간부문)	(84만 가구)	(72)	(63)	(59)	(64)

□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재고도 부족하지만, 각종 규제에 의해 품질도 떨어져\* 중산층이 거주를 기피하는 경향

\*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 하자민원은 '14년 2,289건으로 13년 대비 22.2% 증가

□ 이에 따라, 임차거주를 희망하는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사적인 임대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어 주거불안이 더 커지는 경향

\* 5~8분위 가구중 임차가구는 45.5%이며, 이 중 90.3%가 민간임대에 거주('14년)

-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불안요인은, 계약만료후 임대료 상승(49.4%), 짧은 계약기간(29.4%), 임대기간 중 퇴거요구(24.9%) 順

◆ 우선,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속 확충

- '15년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연 11만호에서 12만호로 확대하고, '16년 이후에도 재고를 지속 확충

◆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에 대해서는, 민간의 활력을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

- 특히,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

## II.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전략

기업형 임대주택 = 중산층 주거혁신 = 민간임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

□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은,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 제공

- ◆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임대주택에서,
- ◆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 ◆ 임대료도 적정수준에서 관리되며,
- ◆ 비자발적인 퇴거 위험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 기업형 임대 육성은,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효과

- ◆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유도하고,
- ◆ 전세압력을 줄여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 ◆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

□ 그러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아직 수요도 초기상태이고 공급기반도 부족하므로, 충분한 지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을 육성할 필요

□ 이를 위해, 기존 임대주택 정책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

- ◆ 적정 수익률 확보를 위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지원은 최대화
- ◆ 특히, 기업형 임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
- ◆ 제도개편을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법'을 제정
- ◆ 법 제정 이전이라도, 지침개정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

□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2015년 국토부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이를, 「중산층 주거혁신, 'NEW STAY' 정책」으로 브랜딩

### Ⅲ. 기업형 임대 육성 방안 (1) 규제 재설계

#### 1. 규제 최소화 (핵심규제 6개 → 2개로 축소)

- (개선) 모든 민간임대 사업자는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 받더라도,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승률 제한 외의 공공임대 규제 배제
  - (임대 의무기간)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임대 의무기간 내에는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사유 규정
  -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로 제한(직전 계약 금액을 기준)

구 분	현재	개선
임대 의무기간	○	○
임대료 상승제한 (연 5%)	○	○
분양전환 의무	○	×
임차인 자격 (무주택, 청약자)	○	×
초기 임대료 (표준임대료)	○	×
임대주택 저당권 설정제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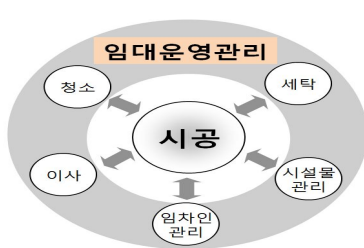
#### 2. 민간임대 유형을 단순화 하고, 기업형 임대도입

- 일반형 임대는 8년 장기임대(= 준공공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단순화
- 기업형 임대는 8년 장기임대 주택을 일정규모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종합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료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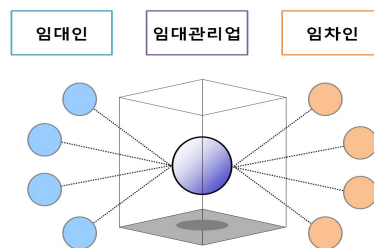
현행 민간임대		개선 민간임대
5년/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	10년 준공공매입임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8년 장기임대 (=준공공임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기업형 임대</div>             4년 단기임대           </div>
5년 민간건설임대	5년 민간매입임대	

### 3.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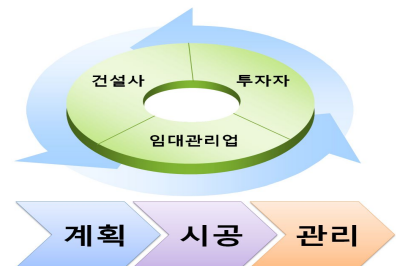
- (개념)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호 (건설임대) 또는 100호 (매입임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로써,
  - 단순한 시설물·임차인 관리 외에 세탁, 청소, 이사, 육아, 식사제공, 가구·가전 렌탈 등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
- (유형) 주택건설업체, 매입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리츠 등 다양한 주체가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참여
  - \* (건설·위탁형) 건설업체가 8년 장기임대를 건설하고, 직접 또는 위탁관리
  - \* (매입·위탁형) 매입사업자가 8년 장기임대를 매입하고, 직접 또는 위탁관리
  - \* (리츠형) 건설사·투자자·주택임대관리업체 등이 공동으로 리츠 등을 설립



< 건설·위탁형 >



< 매입·위탁형 >



< 리츠형 >

- (업무영역 확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선정, 이사, 청소, 세탁, 육아 등의 **종합 주거서비스**를,
  - 자체적인 조직 또는 지역내 중소규모 업체와 협업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선진국과 같은 **종합 부동산회사** 육성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가칭, New Stay 지구)」 사업 시행권 부여
- 기업형 임대리츠에 한하여 주택기금 출자 허용
- 기업형 임대리츠 주택 중 일부는 LH 매입확약

#### 4. 일반형 임대사업자 육성

##### □ 장기임대는 8년 이상 임대 유도

- (현황) 기존의 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는 사실상 5년 후 분양 전환되어 장기임대 재고확충 효과가 미흡
- (개선) 장기임대는 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는 폐지\*하고, 실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준공공임대로 단일화

\* 기 공급된 5년/10년 공공임대 택지는 승인 조건대로 건설하되, 신규 공공택지 공급중단

##### □ 준공공임대 (=8년 장기임대) 요건 완화

- (현황) 준공공 매입임대는 지원에 비해 규제가 과도(임대의무기간, 면적제한, 초기 임대료 규제 등)하여 등록실적 미미('14.12월 누계 503호)
- (개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면적 제한(85㎡ 이하)을 없애고, 실효성 없는 초기 임대료 규제\*도 폐지

\* 현재 초기 임대료를 시세수준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세'에 대한 판단 곤란

##### □ 단기임대는 등록 활성화 및 임대기간 확대

- (현황) 단기임대 중 기금 등 지원을 받는 5년 민간건설 공공임대는 사실상 2.5년후 분양전환하고, 지원이 없는 5년 민간임대는 실제로 6년간(2년 단위 계약 고려시) 임대함에 따라 사업자 등록 미흡
- (개선) 임대의무기간을 4년으로 단축하여, 민간임대(건설·매입)는 사업자의 자발적 등록을 활성화하되, 민간건설 공공임대는 실제 임대기간을 2.5년에서 4년으로 확대

##### □ 단기 및 장기 임대사업자 부담완화

- 주택 임대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건보료 부담 인하 추진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 철회시 과태료 인하 (3천만원→1천만원)

### Ⅲ. 기업형 임대 육성 방안 (2) 택지 지원

#### 1. 다양한 부지 활용

- 국공유지, LH 보유택지, 개발제한구역 등 공공부문에서 가용한 모든 택지를 공급하고, 재정비 지역·개인 사유지 등 민간부지도 적극 활용

구 분		부지 유형
공공 부지	공공부지	캠코부지·우체국·동사무소, 역세권 부지, 공공기관 지방이전부지
	LH 보유택지	미매각 학교부지, 수도권 내 장기미매각 용지, LH 사업승인후 미착공 토지, 폐지에정인 민간건설임대용지
	그린벨트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물량 (97.8km <sup>2</sup> , 2,964만평)
민간부지		개발비용 부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차장, 테니스장 등 개인 사유지

- 특히, 금년에 새로이 출범한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자금과 공동으로,
- 노후화된 도심내 국공유지나 사유지에서 다양한 지역수요에 맞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 제시

#### 2.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설

- 개발면적이 1만m<sup>2</sup> 이상으로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전체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절차 간소화

일반 (4단계)	촉진지구 (2단계)
구역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 → 사업계획	지구지정 → 사업계획
1년6개월 ~ 2년 소요	6개월 ~ 1년 소요

- 지구지정시, 지자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일괄부여하고,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도 판매, 업무, 문화·집회 시설(관람장 등 제외)의 복합건설 허용

### Ⅲ. 기업형 임대 육성방안 [3] 금융지원

#### □ 임대사업자에 대한 용자지원 강화

-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용자금리를 인하하고, 임대기간에 따라 추가인하 (8년 이후 1년 증가시마다 10bp 인하, 최대 10년간 100bp 인하)

현행			개선안			
기간 \ 규모	60㎡이하	60~85㎡	기간 \ 규모	60㎡이하	60~85㎡	85㎡초과
5/10년 민간공임	2.7%	3.7% (‘15년 3.3%)	4년 (매입)	3.0%	3.5%	4.0%
8년 준공공매입	2.7% (‘15년 한시 2.0%)		8년 (건설, 매입)	2.0%	2.5%	3.0%

- 8년 장기건설 용자한도를 상향 (7~9천만원 → 0.8~1.2억)하고, 상환 조건도 완화 (임대기간 동안 원금상환 의무 면제)

####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 출자 확대

- 기업형 민간임대 육성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소형 → 중형아파트) 하고, 지원호수도 확대 (‘15년 4천호 → 1만호)
- 기금 출자분의 일부를 보통주에도 출자하여 사업리스크를 분담 하고, 준공 이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점에도 참여

#### □ 기업형 건설임대사업자에 종합금융보증 도입

- 임대주택 건설·운영 등 전체 임대사업 기간 동안 사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 상품을 개발하여 임대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
- ‘종합금융보증’ 이용시 금융비용(대출금리+보증료 포함 4.5% 내외)은 시공사 연대보증 금융비용(6~7%) 대비 연 2% 이상 절감 가능

#### □ 기관 투자자 출구전략 마련

-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일정조건의 주택을 LH가 매입 확약하고, 지분 매각시에는 건설사가 기금과 동일한 순위로 잔여재산 분배



### Ⅲ. 기업형 임대 육성방안 [4] 세제지원

- 임대주택 체계 개편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특히 **8년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에 대한 **지원 강화**
  - (취득세) 8년 장기임대 60~85㎡의 감면폭을 25%에서 50%로 확대
  -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6억원으로 확대하고, 85㎡이하 4년 단기임대 감면폭을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20%~50%에서 75%로 확대
  -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 8년간 100% 감면**
  - (양도세) 4년 건설임대는 4년 매입과 동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에서 40%로 확대하고, **8년 장기**는 60%에서 70%로 확대

구 분	10년건설	준공공임대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	
			건설	매입
취득세	60㎡이하 면제 (60~85㎡ 25% 감면)	60㎡이하 면제	60㎡이하 면제 60~85㎡ 50% 감면	
소득세 법인세	85㎡이하 20% 감면 (기준시가 3억이하)	85㎡이하 50% 감면 (기준시가 3억이하)	⇒ 85㎡이하 75% 감면 (기준시가 6억이하 주택)	
양도세	장특 30%	매입에 한해 장특 60% 및 '17년까지 신규구입시 면제	85㎡ 이하 장특공제 70% (매입임대는 '17년까지 신규구입시 양도세 면제)	

-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위해 양도세 및 법인세 추가 세제지원
  -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양도세액 10% 감면**
  -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 매각시 **법인세 10% 추가과세 배제**

### Ⅲ. 기업형 임대 육성방안 [5] 인프라 구축

#### 1. 법/제도 정비

- ☐ 민간임대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現 임대주택법 전문 개정)
  - 現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임대관리 규정은 「**공공주택 건설촉진법**」으로 이관 (공공임대 건설·관리 규정 모두 규율)
- ☐ 건축원가 변화 등 물가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LH 등 공공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
- ☐ 한국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SPC에 대한 **건설사의 지배력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사는 본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 ☐ 국토부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택지 확보, 세제·기금 지원, 지자체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지원센터**」 설치

#### 2. 주택 임대관리업 육성

- ☐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물량(25.7만호)을 포함하여, LH의 임대주택(75.1만호) 관리업무 전체를 **‘17년까지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되, 임대료 책정, 소득·자산 검증 등 **핵심 업무는 제외**
  - \* ‘15년에는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낮은 5년/10년(2.5만호), 50년(2.6만), 매입임대(8.5만) 등 총 13.7만호를 민간에 개방 → 시장규모가 ‘14년말 대비 53배 커지는 효과
- ☐ 시장이 초기라는 점을 고려, 입찰 심사시 **사업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관리 계약규모도 대형화**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제한을 최소화

## IV. 기대효과

-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
  - (현재) 대부분의 중산층은 2년 단위 전월세 계약시마다 과도한 보증금 상승, 비자발적 퇴거위험(임차가구 평균 거주기간 3.5년) 등에 노출
  - (개선) 기업형 임대주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한 8년 동안 거주 가능하며, 보증금도 연 5%\* 이내 상승으로 안정적으로 관리
- \* 최근 4년간('11~'14), 서울 전세값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연간 7.1% 상승
- 기업형 임대주택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
  - (현재) 저금리 등으로 임대인들은 전세를 줄이는 반면, 임차인들은 주거비 절감을 위해 전세를 희망함에 따라 전세가격은 지속 상승
  - (개선) 중대형 건설업체가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고액 전세 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세압력 분산
- 기업형 임대주택은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유도
  - (현재) 임차인들은 입주나 퇴거시 주택보수나 물품교체 등을 집주인과 비공식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깡통전세 등 위험에 상시노출
  - (개선) 입주, 거주, 퇴거 쉼 단계에서 집주인과 갈등 없이 전문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고, 보증금 리스크도 최소화
- 기업형 임대주택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유도
  - (현재) 과도한 규제, 부족한 지원 등으로 중대형 건설업체의 임대 시장 참여가 저조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 연관산업 발전도 미흡
  - (개선) 수익성 개선으로 중대형 건설업체가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고, 이를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지역 내 소규모 인테리어, 수리업체 등에게 안정적 시장도 제공



농업,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원년**  
**소통과 실천으로 대도약을 이루겠습니다.**  
**= 농업분야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계획 =**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 목 차



I . 2014년 농정 평가 .....	73
II . 2015년 농정 추진방향 .....	79
III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실천계획 .....	85
1. 6차산업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	87
2. 첨단화 · 규모화로 경쟁력 강화 .....	88
3. 현장형 정예인력 육성 .....	90
4. FTA 활용 농식품 수출 확대 .....	92
5.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93





---

## **I . 2014년 농정 평가**

---

**1. '14년 농정과제**

**2. 주요 농정성과**



# 1. '14년 농정과제

- (중장기 농정방향) 국정과제 실천 및 농정신뢰 회복을 위해 박근혜정부 5년간 농정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3~17)」 수립(13)

\* 정부 출범 초기 농정철학 부재 및 농정방향 상실 등에 대한 비판 제기

-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농정비전으로 설정

- 고령화, 양극화 등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효율성에 기초한 배려와 소통의 농정을 기본가치로 설정

- 경쟁력, 소득, 복지의 3대 축을 기초로 5대 분야 100대 과제 선정



- ('14년 농정과제) 박근혜정부 1년차 성과를 바탕으로 2년차 성과 확산 및 쌀관세화·한중FTA 등 현안해소를 위해 3대전략·9대과제를 선정, 속도감있는 농정 추진

1 년 차 성 과	☆ 박근혜정부 농정에 대한 신뢰도 상승: 양호 53%, 보통 13%
	☆ '13년 농가소득이 전년(31백만원) 대비 11.3% 상승(34백만원), 19년 만에 최고(통계청)
	☆ '13년 주요성과: 5대 채소류 가격변동 완화, 쌀 풍작 및 가격안정, 한우·돼지고기 가격안정, 재해보험 확대, 농지연금 가입증가, 직거래인프라 확충 등

- 경영체DB구축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지역과 경영체의 자조·자립과 책임성 제고, 역량결집 및 협업강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

농업 경쟁력 제고	소득·복지 향상	수급·유통 개선
① 6차산업화	④ 농가소득 안정장치 강화	⑦ 안전 농식품 안정적 공급
② ICT·BT융복합 첨단산업화	⑤ 농업재해 대응력 제고,	⑧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③ 개방화 대응 및 수출확대	⑥ 체감형 농촌 복지 서비스 향상	⑨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개발

## 2. 주요 농정성과

### ① 위기 극복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마련

□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설득을 통해 쌀 관세화 결정(7월), WTO 통보(9월)**

☆ **지난 20년간 지속되어 왔던 최대 농정과제인 쌀 관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달**

\*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수시 개최하고, 농해수위·산업위 등 9차례 국회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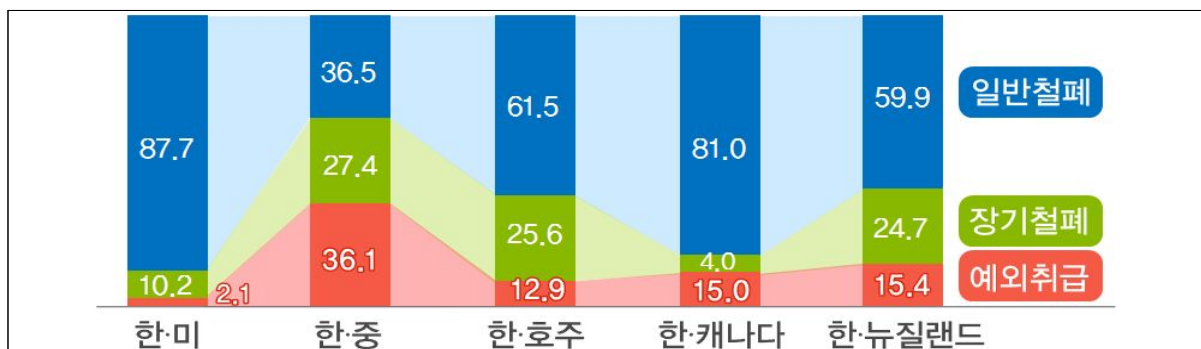
○ 주요 농업인 단체가 **정부입장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쌀 관세화가 큰 갈등 없이 마무리

○ 쌀 관세화 이후 농가소득 안정, 쌀 산업 경쟁력 제고, 쌀 소비 확대,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9월)

□ **한중 및 영연방 FTA는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 한미 FTA 보다 보수적 수준에서 타결**

\* 타결 시기: 호주('13.12), 캐나다('14.3), 중국('14.11), 뉴질랜드('14.11), 베트남('14.12)

○ 국가별·품목별로 **협정제외(쌀), 양허제외, 저율관세(TRQ), 계절관세, 부분감축, 농업세이프가드(ASG, 영연방)** 등 다양한 **예외수단 확보**



○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견을 협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농업계는 **한중 FTA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

\* 한중 FTA 등 협상과정에서 약 180회의 전문가회의·설명회 등 개최

□ **FTA 보완대책을 넘어 한중 FTA 이후 전면적 개방화에 대비한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마련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대도약 기반 마련

\* 영연방대책(2.1조원 추가 지원, '14.9),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토론회('14.11)

## ② 농업의 6차산업화 및 ICT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향상

- 6차산업화 성공사례 확산에 따른 부가가치·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6차산업 창업자가 전년 대비 8.8% 증가하고, 6차산업 예비인증자의 매출액도 전년대비 11.2% 증가

☆ 예산 사과와인은 6차산업화 추진 이전 사과생산 만으로 연 8천만원 매출을 올렸으나, 6차산업 추진으로 연 6.1억원 매출 달성(사과3.5억원, 와인 1.3, 체험 1.3)

☆ 여수 거문도해풍숙 영농조합법인 고용인원은 '12년 17명에서 27명('14)으로 증가

- 들녘경영체, ICT융복합으로 생산성·품질 향상 및 첨단화 촉진
  - 50ha이상 들녘경영체를 158개 육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ICT 융복합 모델 개발(13종) 및 1,280농가 보급
  - \* 들녘경영체(생산비 7.1% ↓), ICT융복합모델(시설원예: 노동비 20% ↓, 생산성 30% ↑ / 양돈 : MSY 3.2두 ↑, 생산성 13% ↑)

## ③ 농식품 수출 확대 및 기업과의 상생협력 기반 마련

- 엔화 가치 하락, 비관세장벽 강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국가전체 증가율(2.4%) 보다 높은 8.1% 증가(61.9억불)
  - 중국 권역별 수출전략 등 정보제공(KOTRA/aT, 3월), 검역협상 타결('14 : 12건) 및 수출보험·통관 지원 등 현장애로 해소
- 대한상의회 MOU('14.8)체결 및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설치('14.9)하고,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 발굴(14건) 등 농업과 기업의 협력 기반 구축

## ④ 농가소득 안정 및 체감형 복지 향상

- 쌀 고정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13 : 80만원/ha → '14 : 90) 및 논 이모작(식량·사료) 작물에 직불금 신규 지급(40만원/ha)
- 재해보험 확대('12 : 51품목 → '14 : 59) 및 재해지원 제도 개선
  - \* 보상기준 표준가격 인상(특정5종 6.4% ↑, 벼 5.6% ↑), 자기부담비율 다양화(70·80% → 60·70·80·85), 최저 가입면적 기준 완화, 가입기간 연장 등

- 재해복구 지원단가 인상\*(21개 항목), 재해지원 절차 간소화, 재해 농가 복구 의무 폐지 등 현장중심의 제도 개선

\* 농경지유실, 과수재배시설, 농약대 등 평균 19.5% 인상

#### □ 영세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배려농정 확대

- 공동생활홈(35개소), 공동급식시설(26개소), 작은목욕탕(14개소) 등 3,000여명 수혜

\* 경로당 등 가사도우미 확대(14 : 16백개소), 65세 이상 1인 가구 지원(2월)

- 버스 미운행 지역 등에 커뮤니티 교통서비스 시범사업 시행(13개소)

- 농지연금(2,927명 → 3,963) 및 연금보험 가입자 증가(290천명 → 317천명)

### ⑤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로컬푸드 등 신유통확산

- 양파는 사상 최대의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가격 급락세를 방어하고, 배추, 마늘, 무 등도 조기에 평년수준을 회복하거나 가격안정구간 진입

\* 양파 : (1월) 760원/kg → (3월) 558 → (6월) 430 → (9월) 548

- 축산물은 수급조절 협의회를 통한 민관공동 상시 수급관리 및 자율감축, 소비촉진 등으로 한우, 돼지가격 등이 평년수준 상회

\* 한우 큰수소('13 : 502만원/600kg → '14 : 541), 돼지('13 : 30만원/110kg → '14 : 40)

- 직거래 인프라 확충으로 신유통경로를 통한 거래액이 전년대비 27.9% 증가(6.5조원)하면서 유통비용 절감액(6,200억원)이 47.6% 증가

### ⑥ 스마트 농정 체계 구축으로 농정성과 확산 기반 마련

-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1,891마을 참여) 추진으로 자조자립 정신 제고

- 농업경영체 DB 구축 및 관련 정보 연계를 통해 스마트농정 기반 구축

- 경영체 DB 일제갱신으로 경영주 인적사항, 농지면적, 판매금액, 소득, 보조금 지원현황, 면세유 배정량 등 93개 정보 DB 구축

- 경영체 DB와 농림사업 연계·통합 및 농업경영체 등에 지원된 보조지원 시설(87천건) DB화

- 지역단위 농발계획 수립(14개 시·도, 163개 시·군·구) 추진으로 지역중심 농정추진 기반 구축

---

## Ⅱ. 2015년 농정 추진방향

---

1. 농정방향

2. 추진체계도





# 1. 농정방향

## 가 기본방향

- 전면적 개방화 체제 진입과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등의 위기에 대응하여 3년의 농정혁신을 통해 30년의 성장을 견인
  - 지난 2년간 박근혜정부 농정성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방안(14.11)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실천
  - 지난해 말 타결된 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과의 FTA대책 수립을 통해 농업계의 불안감 해소

## 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바탕으로 ① 농업의 6차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②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 ③ 행복한 농촌만들기와 삶의 질 향상에 집중

-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
  - 지역중심 6차산업화를 통한 농외소득 창출, 지역친화형 로컬푸드 등 직거래 확산 및 농촌관광 품질 향상
- 전면적 개방화 체제에 대응하여 우리 농식품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수출산업으로 육성
  - ICT융복합으로 농업·농촌 혁신, 논·밭 공동경영 활성화로 규모화 촉진,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 시스템 구축 및 정예인력 육성
  - FTA를 기회로 농업 외부의 기술·자본과 연계하여 수출시장 확대
- 살기 좋은 행복농촌 조성 및 체감형 복지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정주여건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영세고령농 배려 및 귀농·귀촌 활성화

## 다 FTA 등 개방화 대책 수립

### FTA 등 철저한 개방화 대책으로 정책 추동력 확보 및 농정신뢰 회복

- 개방화 및 농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 등이 농가경제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정책부담으로 작용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동력을 확보하고 농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한 개방화대책 수립 필요
- FTA 체결 영향을 분석하여 농업인, 전문가, 지자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가별·품목별 대책 수립
  -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쌀 농업 중심 기반정비, 기계화, 인력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본적 체질개선 대책 수립
    - 직불제 확충과 대체재 수입에 따른 간접피해를 보상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농가경영 불안요인 최소화
  - 국회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항인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및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을 충실하게 검토

## 라 스마트 농정 정착화

### 스마트 농정을 통해 농정 체감성과 확산

- 박근혜정부 3년차 체감성과를 확산하여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 농정의 정착화를 추진
- 금년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현장 농정 및 협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
  - 경영체DB, 지역단위 농발계획 등을 토대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여 효과를 높이고, 보조금 유용 등 비정상사례 해소
  -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활용성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등은 전면 개선
  - 관련부처, 산하기관, 도시 등 외부와의 협업 활성화

## 2. 추진체계도

### 정책 여건

#### 위기

- ▶ 전면적 개방화 체제 편입
- ▶ 취약한 농업 구조

#### 기회

- ▶ ICT·BT 기술의 융복합 확대
- ▶ 건강·휴양 및 삶의 질 중시

향후 10년간 농업생산액 평균 증가율이 1%대로 하락, 성장잠재력 위축 우려

### 핵심 과제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효율성에 기초한 **배려와 소통** 농정

#### 농업의 6차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 6차산업 경영체 육성
- 로컬푸드 등 신유통 확산
- 농촌관광 활성화

####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 첨단화, 규모화
- 정예인력 육성
- 농식품 수출확대

#### 행복한 농촌 만들기와 삶의 질 향상

- 정주여건 개선
- 주민 복지 증진
- 귀농·귀촌 촉진

### 정책 기반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3~'17)
- ▶ 경제혁신 3개년 계획(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 정부3.0



---

## Ⅲ.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실천계획

---

1. 6차산업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2. 첨단화 · 규모화로 경쟁력 강화
3. 현장형 정예인력 육성
4. FTA 활용 농식품 수출 확대
5.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1. 6차산업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 1 '14년 농정평가

#### 가. 성 과

- '6차산업 (예비)인증 사업자'('14 : 379개소) 선정, 현장애로 해소·판로 확대 등을 통해 **경영체별 매출액 전년대비 11.2% 증가**

\* 예비인증 사업자 매출액 : ('13) 평균 747백만원 → ('14) 831

- 온/오프라인 직거래 인프라 확충 등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전국 확산 ('12 : 3개소 → '14 : 71) 및 **신유통비중 증가**('13 : 10.9% → '14 : 14.6)

#### 나. 미흡한 점

- 정책 확산 초기 단계로 법적·제도적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6차산업 관련 정책**(제조·가공·외식·관광 등) 간의 **유기적 연계 부족**

- 농촌 관광자원의 **연계형 프로그램 부족** 및 **낮은 서비스 수준**으로 **재방문율이 낮으며** **관광객 유입에도 한계**

\* 농촌체험마을 방문지역에 대한 재방문 의향률 : ('11) 81.5% → ('14) 72.7

### 2 '15년 추진계획

- 6차산업 창업자 수 전년 대비 **10%**('14:396명 → '15:435) 증가

-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해 인증사업자를 선정하고 경영체별 관리카드 DB구축하여 **맞춤형 상담 및 코칭 제공**

- **제조·가공시설 디렉토리** 구축(3월), 6차산업 **지구**(신규 6개) 조성하여 지역농업특화 클러스터로 육성

- 전국 생산작물·가공시설·관광자원 등 **빅 데이터** 구축 및 최적 연계 프로그램 마련 추진

○ **농지규제**(농업진흥지역 내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허용) **합리화** 및 **산림규제**(사유 휴양림 조성시 산지전용신고 의제) **완화**

-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식품 제조·가공시설 조례·규칙 제정 확산 및 전통주 인터넷 판매 확대 등 현장규제 지속 발굴, 개선

\* 시설기준 완화 조례·규칙 제정 지자체 : ('14) 20개 → ('15 목표) 50

□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를 통해 약 7,300억원의 유통비용 절감**

○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13 : 32개소 → '15 : 100)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운영 내실화, 기업 등과 협력하는 상생 직거래 장터 개설 지원(10개소)

○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운영(6월), 농수산물·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6월~) 등 ICT 활용 직거래 활성화

□ **농촌관광 수요에 부응하여 체험마을 이용자수를 11백만명까지 확대**

○ 승마장, 휴양림 등 농촌의 전원(田園), 생태 가치를 활용한 관광 자원 발굴 확대

○ 철도인프라와 농촌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확대('14 : 9종 → '15 : 15) 및 지역단위 농촌관광 컨소시엄 구성 지원(2~3월 8개소 4억원)

○ 농촌관광 등급제 확대(350개소) 및 농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 마련 등 관광 인프라 확충

## 2. 첨단화·규모화로 경쟁력 강화

### 1 '14년 농정평가

#### 가. 성과

□ **쌀 들녘경영체를 중심으로 공동영농이 확대\*되고 ICT 융복합 확산을 통해 생산성 향상\*\***

\* 들녘경영체 수 및 경영 면적 : ('13) 132개소(25천ha) → ('14) 158(32)

\*\* ICT시설 딸기 조수입(0.5ha기준) : 71백만원 → 93



## 나. 미흡한 점

- 들녘경영체 운영이 공동 육묘·방제 수준에 그쳐 단일영농계획 수립 등 공동경영 심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
  - 벼 단일 품목 경영체가 대부분으로 다양한 소득증대형 지역 공동영농체로의 발전은 미미
  - 밭농업은 영세소농이 많고, 다품목·소량 생산 및 개별 생산자 중심 시장 출하로 조직화, 공동경영체 육성에 애로
- 시설 노후화\*, 농가의 ICT 인식 미흡 등으로 인해 ICT 융복합 첨단시설의 전면적 확산에 한계
  - \* (사례) ICT 융복합 사업에 딸기재배 109농가가 신청하였으나 시설여건이 양호한 33농가만 지원

2	'15년 추진계획
---	-----------

- 첨단농업 구축을 위해 ICT 융복합 스마트팜 보급 확산
  - \* 현대화 / 첨단온실(누계) : ('13) 10,500ha / 345ha → ('15) 13,200 / 755
  - 기존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원예 1,150ha, 축산 2,786억원), 수출·고소득 품목(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등) 중심으로 스마트 온실 보급\* 가속화
    - \* 첨단온실 신축 : 20ha, 첨단 스마트 온실(복합환경제어/원격환경관리) : 330ha
  -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ICT를 통해 농업 경제활동과 농촌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표준모델 구축(창조마을)
  - ICT 시설도입 단계별(사전-설치-확인) 전문가 컨설팅, 현장 기술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실습형 교육농장 확대\*
    - \* ICT 교육농장(누계) : ('14) 3개소 → ('15) 8(원예 7, 축산 1) / 교육인원 : 800농가
  - 스마트팜 맵을 경작확인·재해보험 등에 활용, 인공위성 이용 작황예측시스템 구축

- 쌀 공동경영 면적을 4천ha로 확대('13년 2.5천ha)하고, 쌀농업 주산지 중심 공동 생산·수급 조절 및 쌀농업 경쟁력 제고
  - 쌀 고정직불금 인상(100만원/ha), 공동경영 수준별 차등지원체계 마련(4월) 및 지역특성에 따른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모델 개발(6월)
  - 받기반 정비 및 기계화 촉진, 쌀직불 지원대상(품목제한 폐지 및 이모작 직불금 단가 인상) 확대 및 수입보장보험 도입('15 : 양파, 콩, 포도)
    - 주요 쌀작물 20품목을 대상으로 241개의 주산지 육성대책 마련
-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만족도 제고('14: 61점 → '15: 65)
  - GAP, HACCP 인증을 확대\*, 친환경 인증과정 2중 점검 시스템 (민간+농관원) 구축(1월), 농약성분 조사 품목 확대(320성분 → 400)
    - \* (GAP) 3.5% → 10, (HACCP) 28% → 37

### 3. 현장형 정예인력 육성

#### 1 '14년 농정평가

#### 가. 성 과

- 한농대 졸업생은 영농종사율이 86.3%에 이르고, 도시근로자보다 높은 소득 실현(일반농가의 2배 수준)
  - \* 소득('13) : 한농대 졸업생 6,814만원, 도시근로자 5,527, 농가평균 3,452

#### 나. 미흡한 점

- 실습교육을 위해 전국에 대표 현장실습장(WPL)을 지정하였으나, 단기 체험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기술교육에는 한계
  - \* '14년 운영된 124개 WPL 실습과정 평균 교육시간은 39시간(5일)
- 계절적 요인 및 정보제공 부족으로 노동력 수급에 미스매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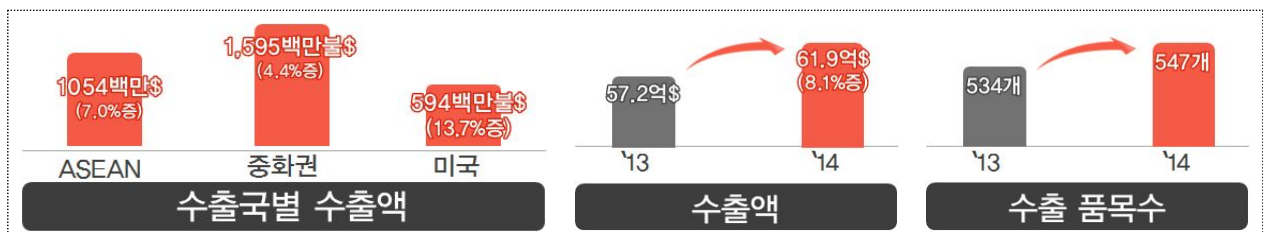
- 농고·농대생들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실습·직업교육 강화
  - 일부 농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로 선정, 영농승계가 가능한 학생 중심으로 농업법인 실습 등 전문교과 비중 확대(70%수준)
  - 농대생의 전문기술과 영농창업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영농창업 특별 교육과정\*(안)' 마련(6월)
    - \* 타 단과대와 협력하여 첨단기술·영어·경영 과목을 중점 교육하고 기업 인턴십·해외연수 등으로 견문 확대
- 핵심인력 7만명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활성화, 인력중개 시스템 개선
  -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시·군 단위 인력 중개(158개 시군, 연간 20만명), 구인·구직 인력풀 확장을 위한 광역단위 정보시스템 구축
- 개방화에 대응하여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한 ICT 등 첨단기술과 선진 농업기술 습득 기회 확대
  - 품목 주산지에 전문농업인 대상 품목 전문교육과정\* 개설(토마토), 해외 교육기관 방문연수 실시('15.하) 및 선진기술 국내 전문성 제고('15 예산 : 3.2억원)
    - \* (기존) 육묘, 재배방식, 병충해 진단·방제 등 기본교육 강의 → (토마토 대학) ICT 설비 제어기술, 재배환경 실시간 진단·활용 관련 이론과 현장중심 실습
  - 생산량이 많고, 재배가 까다로운 품목 중심으로 SNS 실시간 컨설팅 실시 및 대상품목 확대('14 : 6개 품목 → '15 : 20)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사업화율 35%) 등 창·취업 지원 확대
  -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설치(5월)하여 지원, 청년 농업인의 영농창업 애로 해소를 위해 선도농가 실습 확대 및 2030세대 농지 우선지원(2,300ha)

## 4. FTA 활용 농식품 수출 확대

### 1 '14년 농정평가

#### 가. 성과

- 농식품수출('14)은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61.9억불로 동기간 국가 전체산업 수출액 증가율(2.4%) 보다 3.4배 높은 수준 기록



\* 수출액 : (신선농산물) 11.2억불(전년 동기대비 △4.9%), (가공식품) 50.6억불(11.4%↑)

\*\* 미국(13.7%), 일본(2.4%), 중화권(4.4%), ASEAN(7.0%), EU(7.8%) 등 수출 증가

- 적극적 검역협상 추진을 통해 주요 수출유망 품목 검역이슈 해소
  - 베트남 가금육(3월), 필리핀 파프리카(3월), 미국 삼계탕(7월), 멕시코 배(7월), 호주 포도(8월), 칠레 버섯(11월) 등 12개 품목 검역협상 타결 등('14)

#### 나. 미흡한 점

- 엔저, 러시아·EU 농산물 금수 등 여건 악화로 수출 목표 미달성
  -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對日 수출물량 증가 대비 수출액 증가폭 저조
    - \* 대일 수출 실적('14.12월말 기준 전년대비) : 937.8천톤(5.5%↑), 1,316.9백만불(2.4%↑)
- 수입국의 위생, 검역, 통관 등 비관세 장벽 강화에 대한 대응 미흡
  - \* (중국) 수입식품 라벨링 표시기준 강화, (홍콩) 수입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 강화

### 2 '15년 추진계획

- 수출기업 중심 통합적 애로해소 지원으로 농식품 수출액 77억불 달성

- 대중국 수출품목 라벨링 지원(90%), 농수산물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산업부 협업), 비관세장벽 협의체 구성(3월) 및 정보제공(6월 산업부 협업)

\* 온라인을 통해 FTA 체결국별 원산지 기준 확인·원산지 증빙 서류 보관 등 편의 제고

- 아세안·할랄 등 해외 시장별 특화 마케팅 전략 추진\*, 주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 확대

\* 할랄식품 시장 현황('13.6), 중동지역 할랄시장 진출전략('14.9) 발간·배포

## □ FTA를 농식품 수출확대의 계기로, FTA 체결국 수출비중을 40%까지 확대

- 수출 전략품목 발굴(FTA 혜택 및 수출희망 등 종합분석) 및 수출선도 조직 육성(14품목), 제2파프리카 품목\* 대중국 수출 맞춤형 지원(15억원)

\* 5개 품목 : 유자차·유제품·버섯·인삼·화훼

## □ 농업과 외부(기업 등)의 상생협력 사례 본격 확산('14: 14건 → 20(누적))

- 상생협력 경영자문단 운영(1월), 상생협력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화 방안(농촌사회공헌인증제 등 검토) 마련(2월)

## 5.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1 '14년 농정평가

#### 가. 성 과

## □ 농촌 특화형 서비스 확대로 삶의 질 만족도 향상\*, 귀농·귀촌 가구 증가\*\*

\* ('12) 36% → ('14) 41      \*\* ('12) 27천호 → ('13) 32.4

- 대중교통 취약지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하는 농촌형 교통 모델 시범사업 추진('14: 13개소)으로 생활여건 개선

\* 교통서비스 만족도 48.3점 ↑ (운행 前 39.9 → 後 88.2, '14.12 충남발전연구원)

- 범 부처 합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15~'19) 수립(12월)

## 나. 미흡한 점

- 현장 애로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마을정주환경 개선사업 확산이 원활하지 못하고, 읍·면 중심지 거점 기능 미약

\* 지자체 개선 요청사항 : 주민·지자체 부담완화, 짧은 사업 기간(2년), 획일적 총사업비(마을규모 미고려) 등

- 농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미흡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존재

<b>2</b>	<b>'15년 추진계획</b>
----------	------------------

- 삶의 질 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30개 지구)

- 농촌 서비스 전달 거점인 중심지 선도지구 육성(15개지구),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30여지구, 1200여 주택) 추진
- 농촌형 교통모델(19개), 작은시리즈(영화관, 도서관) 등 농촌특성에 맞는 체감형 복지 서비스 확대(관계부처 협업)

- 영세고령농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수혜자 311천명까지 확대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을 각각 17천, 15천 가구로 확대, 공동 생활홈 등 고령농 공동생활시설 71개소\* 조성

\* 공동생활홈(35개소), 공동급식시설(20개소), 작은목욕탕(16개소)

-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금액 상향('14:85만원 → '15:91),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조정(70% → 80수준), 소유농지 면적기준(현행 3ha) 폐지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종합적 지원을 통해 4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를 14천호로 확대

- 조기정착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사업 확대(20개 지구), 수요자 중심(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맞춤형 교육, 선도농가 인턴제, 6차산업 일자리 연계 등 실시
- 도시민이 농업·농촌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농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추진

# 전통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 ❖ ❖    **목      차**    ❖ ❖

<b>I . 2014년 평가 .....</b>	<b>99</b>
<b>II . 정책 여건 및 방향 .....</b>	<b>100</b>
<b>III . 핵심 실천과제 .....</b>	<b>101</b>
1.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혁신의 성공사례를 만들겠습니다. ....	101
1-1. 크루즈 · 마리나, 미래 해양산업의	
아이콘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101
1-2. 해양공간을 경제활성화의 거점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	103
1-3. 해양교통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	105
2. 수산업!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정체를 극복하겠습니다. ....	106
2-1. 수출에서 수산업의 미래를 찾겠습니다. ....	106
2-2. 代를 잇는 젊은 수산업으로 구조를 개혁하겠습니다. ....	109



# I. 2014년 평가

## 1 주요 성과

###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

- 남극 장보고기지('14.2) 등 극지, 차세대 항법체계(e-Nav.), 新자산어보 (예타 중), 울산항 오일허브('14.8 1단계 완공) 등 선도 메가PJT 착수

\* 확장적 거시정책에 부응,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 : 47,050억원('14 대비 +7.4%)

### □ 전통 해양수산업의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톤세제 연장(→'19) · 해운보증기구 · 항만재생 등 해운항만의 새로운 발전 계기와 FTA에 대비한 수산물 수출 · 유통 · 가공 기반 마련

### □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한 창조 · 서비스산업 육성

- 해양심층수 온도차 발전기술, 바이오플락 등 신개념 무환수(無換水) 양식시스템 및 로봇 기반 해파리 제거 등의 기술 확보
- 크루즈 관광객 100만명 돌파('13. 79만), 마리나서비스업 신설(법 개정) 등

## 2 미흡한 점

### □ 해양수산 발전을 저해하는 후진적 요인 상존

- 예비 IUU어업국 상태 지속(지정 해제 움직임 시현), 선원 · 선박현대화 투자 저조 및 고령화 등 어촌 활력 회복에는 시일 소요

### □ 정책 고도화와 현안 해결을 위한 뒷심 부족

- 북극항로 운항연기(용선료 부담) 및 부산항 재개발 등 핵심사업 지연

### □ 세월호 등 연이은 해양사고로 안전관리의 구조적 문제 노출

-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 · 감독 미흡 및 안전투자 여건 미숙

## II. 정책 여건 및 방향

### 1 전통 해양수산업의 현 위치

- (해양산업) 경쟁항만 부상과 해운불황 장기화로 양적 성장은 한계에 직면하였고, 해상교통은 영세·노후화(해양서비스업은 태동 단계)
- (수산업) 자원 감소·고령화와 함께 폐쇄적인 산업구조(인력·자본 진입장벽)로 활력이 저하된 가운데 한·중 FTA 등으로 불확실성 고조

### 2 향후 정책 방향

- (해양산업) 소득 4만불 시대, 해양산업의 도약(퀀텀 리프) 실현
  - (서비스업 육성) 크루즈, 마리나 등을 집중 육성하여,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외연 확대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화 유도
  - (지역경제의 새로운 블루칩) 항만(배후단지)을 물류 중심에서 제조·해양 新산업·문화·도심 기능 등이 집적된 융복합 산업단지로 리모델링
  - (해상교통 품격 제고) 개방·경쟁 등을 통해 우수선사 진입 등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낙도·생활항로)하는 등 안전·서비스 투자 확대
- (수산업) FTA를 기회로 역이용하는 수출 산업화, 미래 세대를 위한 수산업·어촌 구조개선에 집중
  - (수출산업화) 디자인·브랜드 역량 강화로 수출 경쟁력 제고·해외 시장 다변화, 프리미엄 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종자 산업 육성 등
  - (구조개선) 양식 면허제도 전면개편 등 진입장벽 해소(인력·기술·자본), '명품어촌' 확산 등 지역별 6차산업화 특화모델 확립

### Ⅲ. 핵심 실천과제

#### 1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혁신의 성공사례를 만들겠습니다.

##### 1. 크루즈·마리나, 미래 해양산업의 아이콘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① 관광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동력, 크루즈

###### ○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 \* 크루즈법 제정 후속 조치

-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및 해외 마케팅·전문인력(100여명) 양성 지원

\* 취항 시 관광진흥기금 대여, 선상카지노 허가, 외국인 종사자 복수비자 발급 등 지원

###### ○ 국내 항만을 母港으로 하는 외국 크루즈선사 유치

\* (모항 이용) 숙박 등 부대수입 발생, 연간 약 900억원 vs. (단순 기항) 연간 약 427억원

- '(유치활동 강화) 기항지(寄港地)의 자연·문화, 지리적 잇점 등을 활용한 관광컨텐츠·프로그램 개발(지자체 협업)

\* 예시) 제주권 : 무비자 입국(120시간)·고유의 관광자산 활용,  
강원권 : 동해·속초항 등에 중국 크루즈선 기항 유치('15.9)

- (마케팅) 제주 국제크루즈포럼('15.8), 민관 합동 유치설명회('15.3) 및 한-중-일 공동 크루즈상품 개발 등 해운협력 강화

###### ○ 크루즈선 기항 인프라 지속 확충

- 부산북항('15.7) 등 전용부두 10개 선석\*을 확충(~'20)

\* <운영 중> 부산 동삼동(8만), 여수신항(15만), 제주항(8만), <개발 중> 부산북항(10만), 인천항(15만, '17), 서귀포항(15만x2, '16), <계획> 목포항(3만), 속초항(3만), 제주항(10만)

## ②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균형성장하는 마리아산업

### ○ 서비스업 신설 및 활성화 \* '14.12월 마리아법 개정

- 선박 대여·보관·계류업 신설, 선박·선석 분양 또는 회원권제 도입 등 서비스업 발전기반\* 조성('15.上, 마리아항만법 시행령 개정)

\* (선박 이용자·대여업자) 저렴한 이용, (선박 소유자) 관리비용 절감,  
(사업·투자자) 투자금 확보 용이, 리조트 등 복합 마리아 개발 가능

### ○ 민간투자 촉진(규제·제도 개선)

- 민간 마리아항만에 대한 점·사용료 감면비율 확대(현 50%→100%,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개정)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15.上)

※ 부산북항 해외 마리아 사업자 유치(싱가폴 SUTL社와 실시협약, '15.上)

-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참여기관 수는 2→1개로 완화('15.下, 마리아법 개정)하고, 마리아산업시설 조성절차 합리화\*(국토부 협의)

- 거점형 마리아항만('15.上, 민자)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정 6개소를 포함한 대상지 선택 자율권 부여('14.12~'15.5, 사업공모)

\* 인천 덕적도, 군산 고군산, 여수 엑스포, 창원 명동, 울주 진하, 울진 후포

### ○ 레저선박 제조산업 등 육성 \* 등록 선박 : 11,359척, 제조업체 : 59개

- (세제) 국산 레저선박 구매수요 확대를 위해 관련 지방세 중과 기준을 1억원→3억원으로 상향 추진(행자부 협의 중)

\* (1억원 이상) 취득세 10.02%, 재산세 5% 등 중과세, (1억원 미만) 2.02%, 재산세 0.3%

< 문 제 점 >

· 新造 거래가격이 4억원인 외국산 모터보트(10m이상)는 건조 5년 후 수입·판매 시 시가표준액이 약 9,100만원으로 평가되어 중과세 회피 가능

- (수출) 수출용 제조기업 식별코드를 레저선박에도 발급('15.上)

- (국산화) 메가요트 기술개발('15~'19, 210억원)에 착수하고, 중소 레저선박 제조업체의 해외보트쇼 참가 지원

## 2. 해양공간을 경제활성화의 거점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 ① 항만배후단지\* : 돈과 사람이 모이는 지역경제 중심으로 리모델링

\* ('14.12 기준) ①임대분양률 81%(여의도 면적의 21배인 6,041천㎡ 공급, 4,935천㎡ 임대), ②외국인 직접투자 1,083억원, 영업기동률 78.8%(132개 유치기업 중 104개), ③일자리 4,228개('13~'14)

○ (개발방식) 기존 정부개발·민간임대방식에서 민간 주도의 개발·분양도 허용하여 글로벌 기업 유치 촉진(1종 배후단지)

○ (도심기능 강화) 상업·주거·업무용 시설 설치 허용(2종 배후단지)

\* (1종 배후단지) 물류 기능, 임대개발, (2종 배후단지) 도시 기능, 분양 가능

○ (제조업 차별 해소\*) 입주기업 선정 평가제도와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물류기업과 동등한 입주환경 조성('15.1 시행)

\* 입주예정 기업 37개 중 50% 이상 영업 시 일자리 560여개 창출 예상('15)

○ (마케팅) 항만별 Biz모델\*을 개발하여,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 (부산항) 일본 물류·화학기업 중점 공략, (광양항) 화학·제철 등 배후산업 연계 기업 마케팅, (인천항) 對중국 및 수도권 화물 중심 물류기지

< 실제 투자사례 : 부산신항 배후단지 日 기업 >

①MS Distripark('09.2 입주, '13년 매출 132억원, 당기 순이익 20억원, 고용 80명),

②미쓰이소코코리아, ③THE NICE KOREA('14.6 입주, 각각 6백만불 투자)

○ (세제 등) 자유무역지역(FTZ)을 확대 운영하고, FTZ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추진(외투기업 : 법인·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 ② 연안에서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

○ 바다 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 제한 완화

\* 21개 시·군 10개 灣 3,230km<sup>2</sup>(서울시의 5.3배-육지 368, 해역 2,526, 내수면 336)

- (보호구역 축소) '17년까지 육지부(368km<sup>2</sup>)의 30% 해제\*('15.6 고시 개정)

\* ①육상오염원 차단이 가능한 지역 대상, ②기후변화 등 산란·서식장 변화를 고려한 보호구역 재조정과 연계 추진

- (문화·경제활동 지원) 관광객·주민 편의시설\* 설치('15. 시행)와 일정면적 이하의 음식점·생활형 숙박업 허용 검토('15.6)

\* 숙박·오락시설·Hits집 外 복지·문화·환경정비·레저용 기반 시설 포함

- (소형조선 활성화) 낚시·레저선 수요 증가를 감안 건조·수리 가능 어선 규모·대상을 각각 24m→40m 미만, 어선→일반선박으로 확대('15. 시행)

## ○ 무인도서\*의 개발·이용 활성화

\* 전체 2,876개 중 2,421개 관리유형 지정 : ①개발가능 224(9%), ②이용가능 1,165(48%), ③준보전 554(23%), ④절대보전 150(6%) 분류 ⇒ 민간 소유 1,270개(44%)

- 개발여건이 양호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도서(민간 소유)는 관리유형을 변경(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하여 개발 촉진\*

\* (지원 내용) 도로, 항만 등 공공시설 지원,  
(투자 추진 사례) ①인천 소어평도 콘도, ②하동 솔섬 청소년수련관

- 개발계획서 제출 면제기준 면적을 33㎡→100㎡ 미만\*, 농림어업용 시설(비닐하우스) 설치기준은 250㎡→500㎡미만으로 완화('15. 시행)

\* 귀어·귀농자에 대한 주택 신축융자 지원 가능 면적인 100㎡ 적용

## ○ 공유수면 이용절차 간소화

- (공유수면) 준공검사 이전 여건 변화 등으로 일부 구간을 먼저 시공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 우선사용 허용(공유수면관리법 개정, '15.下)

\* 점·사용 위치, 목적, 기간, 사용료 등 이용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현황 서비스 제공('15.下)

- (해역이용협의) 서류작성·협의·사후관리 등 소요절차 일체를 전산화하여 기간 단축(30일→20일) 등 추진('15.12)

\* 해역이용협의 건수 : ('08) 1,421건 → ('10) 1,854 → ('12) 2,150 → ('13) 2,180



### 3. 해양교통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 ① 연안운송업 경쟁체제 및 수익구조 확립

- (면허제 개편) 그간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수송수요 기준을 폐지하고 면허 사전공모제\*를 도입하여 민간 경쟁기반 마련

\* 신규면허 발급 시, 기존 先신청자 발급방식 대신 사업자 공모 및 평가를 통해 항로 운영능력이 가장 우수한 사업자에게 면허 발급

- 수송수요 기준 폐지와 함께 자본금 기준 신설, 안전기준 강화\* (해운법 개정) 등을 통해 선사 대형화, 컨소시엄 구성 등 유도

\* 안전책임자 채용 의무화, 예비원 확보의무 강화 등에 따라 소규모 선사 운영 한계

- (운임체계 개편) 하계 등 수요폭증 시 혼잡비용을 반영하는 탄력 운임제, 유가변동을 반영하는 유류할증제 등 도입

#### ② 섬·연안 주민 공공서비스 강화

- (낙도 보조항로) 비영리법인, 대형선사 등에 의한 통합운영 검토

- (도서민 생활항로) 지자체·비영리법인 진입 유도(면허시 가점)

\* 예시) 목포 지역 4개 항로, 4개 농협에 부여된 한정면허→일반면허로 전환

#### ③ 여객선 현대화 촉진

- (신조 촉진)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여객선의 신조 활성화를 위한 선박 공동투자제도 도입 등 검토('15.上, 관계부처 협의)

\* 현대화 사업규모 대폭 확대(500억원→1,250), 상환기간 연장(8년→10) 등 지원조건 개선('15.1)

- (중소조선업 상생) 산업부의 중소 조선업 육성과 연계·협업으로 여객선 신조 수요와 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5개년계획 수립('15.12)

## 1. 수출에서 수산업의 미래를 찾겠습니다.

## ① 수산업, 디자인과 브랜드를 입고 세계로

## ○ 청년 창업과 연계한 디자인 역량 강화

- (1단계) 대학생 · 창업 동아리 · 중소 디자인회사 등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디자인과 아이디어 발굴('15.上)


\* G마켓, 옥션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과 연계 개최하고, 추후 수산 기자재 · 용품 등으로 대상 확대

- (2단계) 수산디자인BANK\*를 구축('15.上)하고, 어업법인 · 온라인 쇼핑몰 입점기업 · 창업자가 활용토록 제공('15.下)

\* 수산 관련 전문 · 대형 쇼핑몰에서 운용 → 추후 일정부분 유료화 등을 통해 디자인 관련 창업 · 중소기업 지원 등에 활용

- (3단계) 수산 관련 창업 희망 · 준비자, 지역 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 창업 희망자와 1:1 디자인 멘토링 지원('16)

## ○ 통합 브랜드 개발

- (수출용) K-Fish  등을 확정('15.1)하고, 홍보 콘텐츠(CF 등) 제작, 해외 기획마케팅 등에 적극 활용(36억원)

· 통합 브랜드를 활용하여 거대(美, 中, ASEAN 등) · 신규 시장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 aT지사 · 수협 수출지원센터 등 협업 강화

- (내수용) 어식백세 를 主브랜드로 소비촉진 활동 강화\*

\* 대형 식품업체와 협업 : 현대그린푸드, 웰스토리, 신세계푸드, 동원홈푸드, 아워홈 등과 협력 MOU 추진('15.上)

## ○ 아시아 3大 수산박람회 육성 : 국산 명품브랜드 배출의 요람

- (1단계)국내 박람회\* 통합·규모화('15)→(2단계)아시아권 핵심박람회(동경, 청도, 방콕)와 네트워크 강화('15~'16)→(3단계)대한민국 대표 박람회 개최('16)

\* 서울수산식품전시회, 부산국제수산물무역박람회, 지역축제 등

## ② 수출시장 다변화

### ○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프리미엄 시장 선점

- 초저온 냉동창고(청도 '14.11 완공)를 본격 운영하여 참치 등 고품질·고가 제품 직수출

\* 對中 참치수출 : ('09) 8,450천불 → ('11) 16,433천불 → ('13) 19,750천불

- 수출지원센터('14. 상해, '15. 청도)·aT 해외지사 등을 거점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중국 내륙 유통망 확보 지원

### ○ 신규시장 개척으로 對日 의존도(37%) 완화 \* '14. 138개국

- 앵커숍\*(6개국·95품목)을 운영하여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 전략 수립·시장 조사를 위해 「해외시장 분석센터」 운영('15.3, KMI)

\* ('14. 5개소·81품목) 中 우한, 대만 타이중, 브라질 상파울루, 체코 프라하, 폴란드 바르샤바 → ('15) 중국, 대만, 브라질, 체코, 폴란드, 이탈리아(신규)

## ③ 수출 가공·종자산업 육성

\* 수산 가공품 수출 비중 : 30.3%('13년 수출액 21.5억불 중 6.5억불)

### ○ 가공 인프라 확충

- (產地) 유통기능이 결합된 처리저장시설(4개소) 조성, 공동가공시설 현대화(7개소)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가공하여 고부가가치화

\* (산지처리저장시설) 경기 평택, 전남 장흥, 경북 포항, 제주  
(공동가공시설) 강원 속초·고성, 경북 울진, 전남 장흥·강진·영광, 경기 평택

- (소비지) 도매시장 등을 가공·전시·관광 등의 복합공간화

\*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15.8),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15~'18), 자갈치 시장 해양수산 복합 전시문화공간('14~'17), 대구 소비지분산물류센터('16)

※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업(롯데) : 관광상품화, 유통·판로 확보 지원

○ 식품가공 관련산업 육성

- 천일염의 이용범위 확대(의약품·음료 등)·해외진출 맞춤형 상품 개발, 젓갈 명품화 등 전통식품산업 활성화

\* (천일염)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요오드 첨가 가공염 개발('15.12)  
(젓 갈) 명품화를 위한 저염 상품·브랜드 개발 등 육성계획 수립('15.11)

- 가구구조 변화(1·2인 가구 증가),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간편·편이 식품·건강기능성\* 등 新수인가공식품 연구·개발 본격화(22억원)

\* 신물질 추출기술을 이용한 후코이단(미역), 항산화영양제(스피루리나) 등

#### 4 우량종자 개발

○ 수출 전략품목 종자 개발

- 10대 품목의 생산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종자를 개발(169억원)하고, 우량종자의 신속 보급을 위한 신품종보급센터 확충(넙치→전복)

\* 종자업계의 계획생산·수급조절을 위한 수산종자관측사업(김, 전복, 넙치) 실시 및 산업현장 기술·경영 클리닉 시범사업 추진

< 10대 수출 전략품목의 맞춤형 육성 방안 >

전 략	품 목	지원 방안
산업화	넙치, 전복, 해조류	생산·가공·수출 산업화 지원
단기 집중육성	해삼, 민물장어	종자개발, 양식기술 개발 집중
중장기 기반마련	다랑어, 갯벌참굴, 관상어	제도 정비, 양식기술 개발
현지 생산	능성어, 새우	해외어장 개발

○ 종자수출 지원(Golden Seed Project)

- 넙치, 전복, 바리과, 김 등 고부가가치 수출종자 개발 지속 추진(80억원)

## 2. 代를 잇는 젊은 수산업으로 구조를 개혁하겠습니다.

### ① 진입장벽 완화

#### ○ 50년 만의 양식 면허제도 개편(양식산업발전법 제정)

- 양식업 규모화를 위해 어업회사법인과 외부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면허 자격기준을 완화

\* 대상품목(안) : 참다랑어, 연어류(바다송어), 능성어, 비식용 해조류 등

- 심사·평가를 거쳐 유희·부실 어장은 재면허 제한

#### ○ 어촌의 청년창업 활성화

- 귀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10. 65명→'14.10. 134)을 위해 어촌계 가입 요건을 지구별수협 조합원→일반 어업인\*으로 확대·개방('15.下)

\* 연간 어업경영 판매액 120만원 이상, 연중 60일 이상 어업종사자 등

- 창업·주택자금 지원 대상을 양식·어업→유통·가공·레저로 확대

### ② 어촌경제 구조 개편

#### ○ 어촌 혁신사례의 전국 확산(수산업 6차 산업화 촉진)

- 성공사례를 Biz모델화하여 확산시키는 등 모델별 “명품어촌” 선정
- 1차적으로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어촌체험 마을(106개소)은 등급제를 시행하여 운영 내실화

\* '14~'15년 간 마을당 5억원 지원 : ①태안 중장 5리, ②해남 송호·중리, ③거제 해금강, ④여수시 안포, ⑤양양 남애(바닷속체험마을)

- 시범사업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6차 산업화 모델\* 정착

\* 예시) (신상품 개발형) 어촌 고유자원(관광, 문화, 수산 등)+R&D=신상품·서비스, (저이용·폐자원 활용형) 유희 어촌자원+R&D=자원 이용도 제고, (판로 다각화형) 어촌 생산·제조품+자본투자=판로 개척·다각화, (복합형) 모델간 융합

## ○ 어촌·어항시설 고도화 및 부가기능 활성화

### - 어항 정비·개발을 위해 재정 16백억원 투자('15)

\* 방파제·물양장 등 개발·정비(14백억원), 다기능어항·어항고도화·미항 (2백억원)

### - 국가어항 유희 부지 내 수역 내 부잔교·신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시설 설치 등 민자사업 발굴·유치

\* 대상사업 선정·타당성 분석('15.1~9)→사업 확정('15.12)→사업 추진('16)

< 민자개발 추진 사례(협의 중) >

① 부잔교 설치(H社 등 41개항 약 600억원, '15.12~'18),

②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S社 등 4개 기업 전남 계마항, 약 60억원, '15.6~'18)

### - 어촌관광구역 내 민간 조성 휴게시설(숙박·오락·목욕 등)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귀속되는 규제를 폐지('15. 시행)하여 투자 촉진

## ○ 어촌 복지망 확충

### - 영세·창업 어가를 위한 營漁도우미·후견인 제도 시행(520 어가)

### -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18개→21개)하고, 시범사업 일부 품목을 본사업으로 편입\*\*(5개→9개)

\* 신규(3) : 가리비, 송어, 톳 / \*\* 본사업(4, 잠정) :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 -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5톤 이상→4톤)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어선원의 상급 종합병원 이용을 활성화('15.10)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15.6)

### - 원격의료 확산(상선·원양어선원, 도서 주민→전국 어촌) 추진(복지부 협업)

경제혁신과 30년의 성장,  
“바다의 힘”으로 일구어 내겠습니다.